



주간통일정세 2009-44(2009.10.26~11.0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4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수풍발전소 현지지도(10/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수풍발전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수풍발전소의 기술개건(改建) 상황과 전력생산 실태를 살펴보고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발전 설비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벌이고 새로운 기술을 창안 도입”해야 한다면서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존 발전기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건설 중인 발전기 설치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
-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소개

● 김정일, 군 공연 관람(10/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3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한 제567부대, 제531부대, 제762부대, 제630부대 산하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 후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전진하여온 우리의 영광스러운 혁명사는 예술의 위력을 뚜렷이 증시한 음악정치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공연은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국방위원 겸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원홍·현철해·리명수 대장, 한동근 상장 등 군 지휘간부와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당 부장 및 제1부부장들과 책임간부들이 함께 관람

● 김정일, 묘향산 시찰(10/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묘향산 유원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이날 시찰에는 최근 제3국에서 남측 인사들과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수행
- 조선중앙통신은 시찰 동행자 명단을 밝히면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최태복·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박남기 당 부장,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 등만 거론하고 김양건 부장의 동행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선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김 부장의 모습이 포착



- 한편 김 위원장은 여러 시간에 걸쳐 모향산 입구부터 만폭동에 이르는 구간의 참관 노정을 직접 답사한 뒤 “참관자들이 모든 명소에 다 가볼 수 있게 하려면 답사 도로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로 건설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언

● ‘김정일 후계’ 김정은 청진 9군단 방문(10/27, 조선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유력한 셋째아들 김정은이 지난 9월 9일 북·중 국경지역을 담당하는 함경북도 청진의 9군단을 극비리에 방문해 군단장과 정치위원들을 만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정은은 이날 “장군님(김정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대는 국경을 책임진 9군단”이라고 말했다고 함.
-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요즘 북한에서 제1전선은 휴전선이 아닌 북·중 국경지대라고 함. 휴전선 부근과 달리 이 지역에선 북한 군인들이 탈북자들에게 쓰는 총소리가 하루도 끊이지 않을 정도로 위기감이 높다는 것임. 최근엔 9군단 간부 중 마약과 돈벌이 등에 관련된 경우가 많아 국방위에서 직접 관리에 나섰다고 함. 특히 외국 정보기관들이 9군단 관계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 북한 지도부의 위기감이 더 커졌다고 소식통들은 전언, 1996년 6군단 지휘부가 반란을 시도했던 것도 외국 정보당국의 매수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으며 북한 핵심부는 비슷한 사건이 9군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임. 김정은이 직접 9군단 방문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언

● 北후계자 김정은, 찬양가요 ‘발걸음’ 공인(10/27,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을 찬양하는 첫 가요 ‘발걸음’이 북한사회에서 확실하게 공인된 것으로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 드러나 주목
- 북한 언론은 이미 지난 2월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각종 공연 관람에서 ‘발걸음’ 노래를 들은 소식과 북한 내부의 여러 행사에서 이 노래가 공연되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보급되고 있는 실태를 꾸준히 보도해왔음. ‘발걸음’ 노래에 직접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에서 ‘발걸음’이 공공연히 소개됨으로써 이 노래의 정치적 비중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와 더불어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음.
- 북한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치적 후계자 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셋째 아들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공연 관람 등을 통해 다섯 번이나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발걸음’을 감상한 것은 올해 2월 인민군 제 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할 때, 당시 공연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부대 선전대원들이 ‘발걸음’을 불렀다



고 조선중앙통신이 2월23일 전언, 또 중앙통신은 지난 4월21일 김 위원장이 군 제10215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과 같은 달 26일 군 창건일 기념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에서 ‘발걸음’을 합창 또는 혼성 중창으로 관람했고, 5월26일 인민군 ‘감나무중대’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볼 때도 ‘발걸음’을 들은 것으로 전언, 이어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 9일 김정일 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 예술극장을 시찰하고 도(道) 예술단의 개관공연을 관람한 소식을 전했다. 당시 합창으로 ‘발걸음’이 불린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북한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 ‘발걸음’이 주요 레퍼토리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음. 올해 5월 자강도 강계시 학생들이 강계경기장에서 공연한 집단체조 ‘장군님 정든 고향’의 뒷부분은 ‘김정일 장군의 노래’와 ‘발걸음’의 노래선율에 따라 마무리됐다고 북한 언론은 전언, 역시 앞서 4월에 열렸던 군 창건일 기념 조선인민군협주단 공연과 6월 소년단창립일을 맞아 개최된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공연에도 ‘발걸음’이 공연곡의 하나로 사용됐음.
- 특히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6월 19일 내각 상업성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소식을 전하면서 “성에서는 노래 ‘발걸음’에 대한 보급사업도 진행하고 모든 일꾼들이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의 150일 전투”에 매진토록 하고 있다고 보도
- ‘발걸음’은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첫 찬양가요로 북한 최고의 작곡가라는 보천보전자악단의 리종오가 작사와 작곡을 한 것으로 전해짐.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위대성 교양자료’에는 ‘발걸음’을 “21세기의 수령 찬가”라고 주장

나. 정치 관련

● 北, 아프간 정세 주시(10/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비싼 대가를 치르는 침략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미국은 저들이 강점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증파하고 현지 주민들을 유혹하기 위해 돈을 뿌린다고 사태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침략자들은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 남북관계 개선은 절박한 과제(10/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북남관계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 과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북남 사이에 북남관계를 시대의 지향과 겨레의 염원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며 남북간 “대화과 접촉, 내왕과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으로 북남관계는 대결 잔재를 털어버리며 ‘우리민족끼리’ 이념 따라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부터 남조선에서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북남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신문은 주장하고 “최근 우리가 취한 주동적인 조치들은 그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
- 이어 신문은 남과 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이 “북남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이지만 “이것도 북남 사이의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 조선신보, 北, 대결구도 전환 통큰 결단 가능성(10/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북조·미(북·미)-북남 연동의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두 수레바퀴가 맞물려 굴러가는 정세발전”을 염두에 두고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선 조선반도(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전환시키는 통이 큰 결단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또 북한이 10.4선언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종래의 정책적 틀에 구애되지 않는 선택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거나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주저하는 일 없이 행동한다”, “북측 당국의 대담성은 6.15, 10.4(선언)를 마련한 실적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등으로 ‘통 큰 결단’ 가능성을 거듭 강조
- 조선신보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최근 북한 언론매체들의 논조는 “조미관계의 진전과 북남관계의 발전이 연동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권고”라고 주장하고 “격동의 시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측 당국이 상응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
- 신문은 특히 “조미 양자회담의 준비가 다그쳐지는 가운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꾸리기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며 “여러 갈래의 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최근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대남 평화공세가 ‘전술적 차원’이 아닌 정책기조의 변화라고 주장
- 신문은 “김정일 장군님의 특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것도 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특사조의방문단을 시종 김 위원장의 ‘특사’로 표기
- 북한은 북미관계에선 “만단의 준비를 갖춰 이번 기회에 미국과 비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할 용의”를 갖고 있고 남북관계에선 “언론매체를 통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남측에 호소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



● **노동신문, 간부들에 ‘송풍기 역할’ 독려(10/28,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28일 ‘일꾼들은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대고조의 불길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선 간부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에서 “송풍기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신문은 “일꾼들이 (화로의) 송풍기와 같이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위력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온 나라에 혁명적 대고조의 열풍”이 휘몰아친다며 이런 방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강조
- 신문은 “혁명의 송풍기”는 ‘시대어’라고 규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시기 70일 전투, 100일 전투를 벌이던 때처럼 집중적인 선전선동 공세를 드세차게 벌일 것”과 간부들 자신이 “이신작칙(以身作則, 솔선수범)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할 것을 요구

● **조선신보, 오바마 ‘대북 대화’ 공언 실행해야(10/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와 관련, “부시 정권은 대조선 강경책에 매달려 수년간의 세월을 허비하였지만 오바마 정권은 다행히도 조선(북한)의 외교관을 다시 미국에 불러들이는 환경을 조성할수 있었다”며 미국에 북한과 대화할 것을 촉구
- 조선신보는 28일 ‘유언실행’이라는 제목의 ‘메아리’ 코너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때 부시 1기 행정부의 대북 직접 협상 거부 정책을 비판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대화할 용의도 표명해 놓고 당선된 뒤엔 “어느새 전임자의 전철”을 밟아 “협상을 중단시켜 조선을 또 한차례의 핵시험으로 떼밀고 말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주장
-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 것을 후회한다면 대화 상대방이 그러하듯이 ‘유언실행’의 원칙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유언실행’에 대해, 신문은 북한은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고 자신들이 말한 대로 이행하는 나라라고 주장

● **민주조선, 84년 대남 수해지원 언급(10/26,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6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일관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84년 8월 남한에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북측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이를 계기로 남북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점을 강조
- 민주조선은 “우리 공화국은 지금까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시종일관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대표적 사례로 대남 수재민 지원을 꼽음. 신문은 남측 수해 당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큰물피해를 입은 남녘동포들의 가공한 정상을 몹시 가슴아파 하면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북측이 지원한 쌀 5만섬, 천50m, 시멘트 10만t, 의약품 759박스는 “미국과 일본의 구호금에



비해 각각 900배, 180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었다”고 지적

- 특히 신문은 “남조선 수재민들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구호물자 제공을 계기로 북남사이에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러 갈래의 접촉과 대화가 진행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 이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은 확고하며 변함이 없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역설

다. 경제 관련

● 대동강식료공장 준공(10/31, 조선중앙방송)

- 대동강식료공장이 건설돼 30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1일 보도, 준공식에는 광범기 내각 부총리와 정연과 식료일용공업상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 공장 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에게 감사문을 전달

● 北, 상하이 세계박람회 준비위 구성(10/3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1일 “조선이 2010년 5월에 개막되는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무역성 구본태 부상이 상하이 세계박람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구총대표로 선출되고 비상설준비위원회가 조직됐다”고 보도
- 조선신보는 “전람회 개막식에는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이 계획되고 있다”며 “박람회 기간인 9월6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날’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도 고위급대표단이 파견된다”고 소개

● 北휴대전화 가입자 9월말 현재 10만명(10/31,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 9월말 현재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이집트에 본사를 둔 중동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EFG-헤르메스'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
- 이러한 추산치는 지난 6월 말 현재 4만8천명에 비해 석달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그 이전 3개월 동안에도 1만9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었음.

● 北공장·기업소들 ‘컴퓨터화’ 경쟁(10/30, 조선신보)

- 신문은 ‘경제단위들의 컴퓨터화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5-22일 열린 20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는 지난해에 비해 60여개 단위가 더 참가해 성·중앙기관 컴퓨터화 부문, 공장·기업소 컴퓨터화 부문, 전시 부문, 경연 부문, 제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고 설명
- 신문은 이날 ‘임업성 정보추진화 성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선 북한 임



업성이 산하 목재생산 사업소들의 생산, 경영, 판매공급 활동을 컴퓨터로 지휘하는 생산종합지령체계를 수립했으며, 중앙과 지방 사업소 간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화상회의 체제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전언

● **北에너지전문가들 유럽서 재생에너지 기술연수(10/3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비재래식 에너지개발센터'의 재생에너지 전문가 4명이 최근 약 10일간 독일과 스위스의 대학, 연구소, 기업을 방문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 기술에 관해 연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캠퍼스 푸어 크리스투스'의 스테판 부르크하르트 북한 담당관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스위스의 연방기술연구소를 비롯해 태양열과 풍력 발전기를 제작하는 회사 등을 방문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과 이를 사용하는 제품 등을 둘러본 뒤 전문가로부터 관련 기술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힘.
- 10월 26일 귀국한 이들 북한 전문가는 특히 가정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열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택을 설계하는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과 에너지를 전력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해 유럽의 대학, 전문기관, 기업 등과 교류·연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방송은 소개

● **北농업성, 2010년 식량부족 악화 예상(제302호, 오늘의 북한소식; 10/28, 연합)**

- 북한 농업성이 북한의 내년 식량 상황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28일 주장
- '오늘의 북한소식' 302호에서 "지난 10월 1일 농업성에서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농장들의 예상 수확량을 종합해 이 같이 제기했다"며 "농업성에서는 내년 식량위기를 모면하려면 무엇보다 올해 수확한 알곡을 허실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
- 이러한 보고에 북한 노동당 중앙당은 국경지역의 세관을 다 열고 '무역 원천을 새로운 방법으로 구상해 외국과의 무역이 끊이지 않게 하여 식량을 많이 들여오도록 하라'고 무역회사들에 지시를 내리는 등 식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좋은 벗들은 소개

● **北내각, 100일 전투 대책 논의 (10/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를 기한으로 한 '100일 전투' 수행 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회의에서는 '150일 전투(4.20~9.16)' 목표와 3.4분기 인민경제 계획의 수행 결산 및 '100일 전투' 대책과 3.4분기 예산집행 결산 등이 상정됐으며 김영일 총리와 박수길 부총리가 각각 보고했다고 통신은



보도, 회의에서는 “올해를 위대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는 데서 4.4분기가 중요”하므로 ‘100일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회의에는 김영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부서장들이 참가했으며 내각 직속기관 책임일꾼과 관리국장, 도·시·군 인민위원장, 도 농촌경리 위원장, 주요 공장·기업소의 지배인들이 방청

라. 군사 관련

● 北매체들, 南정부와 분리해 군당국 비난 공세(10/31, 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대남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남한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있으나 남한 군 당국에 대해선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의 계기 때마다 “남조선의 호전 세력”이라며 정부와 분리해 강하게 비난
- 31일에도 우리민족끼리는 국군이 실시중인 ‘호국훈련’을 빌미로 “동족대결을 조장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더욱이 엄중한 것은 이번 전쟁연습이 경색됐던 북남관계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북남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내외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北, 최근 KN-02 시험발사는 KN-06 개발 목적(10/3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10월 12일 실시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5기의 시험발사는 기존의 KN-02보다 사거리가 긴 고성능의 KN-06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가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
- 베넷 박사는 “북한이 발사한 5발의 KN-02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는 고성능의 미사일(KN-06)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 발사의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02 미사일은 군사적 측면에서 성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변형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

● 北 10월 발사 단거리미사일 모두 실패(10/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10월 12일 실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5기의 발사시험이 모두 실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북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
- 대북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10월 12일 동해로 발사한 KN-02 미사일 5발 가운데 “두발은 발사 직후 곧장 바다에 떨어졌고, 두 발은 표적을 맞지 못했으며, 마지막에 쏜 미사일은 불발로 끝났다”고 방송은 보도
- 북한은 당일 오전 6시와 8시를 전후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오후 5시에서 6시30분 사이에 추가로 3발을 발사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묘향산서 황새냉이과 새 식물 발견(10/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중앙식물원연구소가 묘향산에서 황새냉이과에 속하는 새로운 식물종류를 발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북한은 이 식물에 ‘향산황새냉이’라는 이름과 ‘Cardamine hyangsanensis S.K.KO et J.O.Ri, Sp.nov’라는 학명을 붙임. 통신은 “묘향산의 칠성동에서 식물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는 향산황새냉이는 여러해살이 풀”이라면서 “땅속의 뿌리줄기는 짧고 줄기는 30~40cm정도 되게 외대로 곧추 자라며 털은 없을 뿐 아니라 잎은 깃모양의 겹잎인데 두께는 얇다”고 밝힘.

- **평양 놀이공원도 급강하탑 새로 설치(10/30, 조선신보)**
 - 지난 4월 현대화 공사에 착수한 북한 평양시내 개선문 인근의 놀이공원인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 궤도회전반, 2중회전반, 3중회전반, 급강하탑 등 새로운 놀이시설이 새로 설치된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 놀이공원에는 힘겨루기, 오토바이 운전 등 30여 종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전자오락관과 각종 식당과 청량음료 매장도 갖춰질 예정

- **北, 고조선 나무곽 무덤 발굴(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평안남도 룡강군 후산리에서 고조선 시대의 나무곽 무덤을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이 무덤은 “고조선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유물들은 고조선 시기의 청동제련 및 철주조, 가공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

- **北도 세계적 신종플루 확산에 긴장(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아직 신종플루 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철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만 최근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강조,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조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와 지역에서 신형독감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여 비행장, 무역항, 국경 초소들에서 검역사업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해 북한 보건 당국이 초비상 상태임을 보여줌.
 - 통신은 그러나 “신형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조선(북한)”이라고 주장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신형독감 바이러스의 침습을 막기 위한 검역 체계를 완비하고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

- **김정일, 김일성대 세계일류로 현대화 지시(10/29,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이 최근 실내 수영관을 짓고 전자도서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3, 9월 두 차례 이 대학을 현지



지도하면서 “세계 1등급의 대학으로 꾸릴”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29일 보도

- 이 대학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올해 2차례 이 대학을 현지지도하면서 이 학교의 “전반 현대화 사업”을 점검했다고 신문은 설명, 김일성대엔 원래 야외수영장이 있었으나 보수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 위원장이 “보수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상급의 현대적인 수영관을 건설해 주자”면서 이는 대학교 직원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는 자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언
- 김일성대는 현재 3호교사 건설도 추진하고 있고, 유개운동장(덮개를 씌운 운동장), 교직원 주택, 학생 기숙사 건설도 계획 중인데 김 위원장은 “대학거리를 새로 형성”할 것도 지시했다고 신문은 소개, 김정일 위원장은 이 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EU, 북한에 6자 회담 복귀 촉구(10/31,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북한에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북한을 방문한 EU 대표단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
- 대표단은 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사실을 공개하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대변인은 전언,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대표단은 10월 26일 평양에 도착, 이날로 5일 간의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칩.

나. 북·미 관계

● 보즈워스, 방북시 김정일과 대화 원치 않아(11/1,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원하는 북미 간 고위급 대화를 위한 양측 간 물밑 접촉에서 미국 측은 대화의 장을 이용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타진하지 않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 신문은 북수의 미국 내 북미협상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이는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이 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
- 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정권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전제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고,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방북에 의욕적이지만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언



- 또 아사히신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에 “6자회담 틀 내의 움직임”이라고 설명해도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달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언
-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미국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조건으로 내건 6자회담 복귀에 대해 북한이 태도를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미국도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전언

● 리근, 유익한 대화 나눴다(10/31,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리근 북한 미국 국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측 인사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 그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샌디에이고와 이곳에서 세미나를 했고,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성 김 대사와 만났다”고 밝힘. 그러나 그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문제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일체 함구
-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성 김 북핵 특사 등 미 국무부 관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의 행보와 관련, “뉴욕에 가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다른 국무부 관리도 뉴욕에 가지 않았다”고 언급

● 보즈워스, 11월 하순 방북(10/29, 요미우리신문)

-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인 다음 달 하순에 북한을 방문, 북미 협상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양측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
-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 북한의 회담 복귀를 둘러싼 최종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관측, 신문에 따르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은 10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리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과의 회담에서 이뤄졌음.
- 이 소식통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방북의 조건이었던 만큼 연내에는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美당국자, 6자회담 재개 진전 없어(10/29, 연합뉴스)

- 미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28일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성 김 특사와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간에 이뤄진 일련의 연쇄 접촉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
- 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0월 24일 뉴욕 회동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북미 접촉 결과와 관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힘. 다만



그는 이번 일련의 접촉이 “많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대화였다”고 평가

- 그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와 관련, “성 김 특사가 북한 및 다른 나라 대표단과 많은 비공식적 대화를 했다”고 언급, 북미간 비공식적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 그는 이어 “성 김 특사가 지난 토요일 리 근 국장을 별도로 만났지만, 또 다른 공식적 만남을 가질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언급

● **美국무부, 성 김 뉴욕방문 결정안됐다(10/29, 연합)**

- 미국 국무부는 28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성 김 특사가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이 참석하는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의 뉴욕 회의 참석 여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언급
- 성 김 특사는 리 근 국장도 참석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 주최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기 위해 26~27일 샌디에이고를 방문

● **美, 北테러지원 재평가 의무화(10/29,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북한행위보고서’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함.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2010 회계연도(2010 10.1~2011 9.30) 국방예산인 국방수권법에 서명
- 북한의 지난 4월과 5월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행위와 관련, 테러지원국 지정여부를 재평가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법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30일 이내에 북한을 법적 기준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2008년 6월 26일 이후 북한의 행위를 조사한 상세보고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테러행위와 테러범 및 테러조직을 지원한 증거가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제출해야 하며 북한이 2008년 6월 10일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범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조사해야 함.
-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북한이 테러리스트나 테러행위와 연계된 국가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무부 장관은 즉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함.

● **美관리, 北인권 6자회담 의제화 필요성 제기(10/27, 연합)**

- 마이클 포스너 미국 국무부 민주.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26일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6자회담



내에서 의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힘. 포스너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가 세계 종교자유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맞춰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무부와 의회가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힘.

- 포스너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가 확대된) 6자회담과 더 광범위한 정치문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내가 국무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인권문제가 어디에서나 의제화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

● 美,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9년째 지정(10/27, 연합)

- 미국 국무부는 26일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얀마(버마),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 이에 따라 북한은 2001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뒤 올해까지 9년째 연속 종교탄압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북한 헌법은 종교적 신념을 자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조사기간에 북한에서 극도로 빈약한 종교자유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지적,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최근 수년간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한 조사와 억압,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 보고서는 “15만~20만명이 종교적 이유로 정치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던 탈북자들은 종교자유를 이유로 수감된 경우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힘.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의 의미에 대해 “종교의 자유는 모든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가치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가치”라고 밝힘.

다. 북·중 관계

● 北 최태복 귀국(10/31, 연합)

-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31일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최 비서를 단장으로 한 노동당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떠남.
- 최 비서는 27일 베이징에 도착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선전부장 등을 만났으며 명문대학인 칭화(淸華)대와 중관촌(中關村) 과학기술단지 등을 방문, 28일에는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예방, 북중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최 비서 일행은 29일부터 30일까지 중국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廣



東)성을 시찰하면서 후 주석의 측근인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당 서기와도 만난 뒤 베이징으로 돌아옴.

- 베이징 소식통들은 “최 비서의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산당과 노동당 사이의 정기적인 고위급 교류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

● 北-中, 나진·청진항 협력개발 나서나(10/31,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 대북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가운데 지린(吉林)성 정부 대표단이 최근 북한 함경북도과 나진선봉시를 방문해 청진항과 나진항 협력개발 방안을 논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주목
- 한창푸(韓長賦) 성장(省長)을 대표로 하는 지린성 정부 대표단이 10월 26-27일 함경북도과 나진선봉시를 방문, 한홍표 함경북도 인민위원장과 김수열 나진선봉시 인민위원장 등과 차례로 만나 청진항과 나진항 공동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린성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청진항과 나진항 공동 개발 방안은 물론 북중 접경지역 다리 보수, 북·중 접경지역에서 나진과 청진항에 이르는 도로건설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며 “나진항 공동개발을 포함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전언,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말을 아꼈음.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또 경제무역 협력과 변경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북·중수교 60주년과 북·중친선의 해를 맞아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키로 약속
- 중국의 성장(省長)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방북에 앞서 합작사업과 관련해 양측이 이미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며 그 핵심은 나진항과 청진항 협력개발일 것으로 보임.

● 中후진타오, 北김정일에 “편리한 시기 방중” 초청(10/29,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통신은 후 주석이 중국을 방문 중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비서를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면담한 자리에서 최 비서에게 이러한 방중 초청 의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이 4년전 북한을 방문해 “열렬한 환대”를 받은 것을 회고했다고 설명
- 후 주석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에 이은 북한 노동당대표단의 방중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두 나라 관계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수교 60주년인 올해 “중조친선의 해”를 계기로 열린 경축행사들과 교류, 협조를 통하여 전통적인 중조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 후 주석은 또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전통



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와 내왕을 가일층 확대하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조선 동지들과 함께 노력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청년 외교관들 북한 방문(10/29, 연합)**

- 중국의 젊은 외교관들이 북한 외무성의 초청을 받아 27일부터 31일 까지 4박5일간 북한을 친선 방문, 중국 외교부는 29일 쑤웨이둥 외교부 아주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 외교관 대표단이 27일부터 방북길에 올랐다고 밝힘.
-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청년 외교관 대표단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 이라면서 “대표단은 외교부 관련부서의 젊은 외교관들로 구성했다”고 설명, 중국 청년 외교관 대표단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면담하고 북한 청년 외교관들과 교류활동을 벌이는 한편 묘향산과 판문점 등을 둘러볼 예정

● **노동당 대표단 방중(10/27,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27일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류홍차이(劉洪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비행장에서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中,北 접경지역 경제개발 내용(10/27, 연합)**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화룡(和龍)시와 난핑(南坪)을 잇는 철도 건설공사가 9월 1일 착공됐다”고 밝힘. 압록강 대교 건설 합의, 남포항에 대한 중국 기업의 보세무역 허용에 이어 최근엔 북한 무산 광산의 철광 운송 확대를 위한 철도가 착공됐고 압록강에는 수력댐을 건설키로 양측이 합의

라. 북·러 관계

● **교육대표단, 러시아 방문(10/29, 평양방송)**

- 러시아를 방문하는 량학순 교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일꾼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북 러시아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 친선노동(10/29, 조선중앙통신)**

-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29일 평안남도 천리마군 ‘조선·러시아친선 고창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을 하고 지원물자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마. 북·일 관계

● 日, 北화물 검사법 각료회의 의결(10/30, 연합)

- 일본 정부는 30일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이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로서, 화물검사는 해상 보안청과 세관이 실시토록 하였음.
- 당초 자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해상자위대의 화물검사 지원 조항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음. 이는 자위대의 국외 파견에 반대하는 연립 여당인 사민당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임. 정부와 여당은 현재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가결할 방침이고, 공명당도 찬성하고 있어서 내달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됨.
- 정부가 이날 확정된 법안은 선박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물품이 실려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상보안청이나 세관이 입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바. 기타외교 관계

● 시리아 정부경제대표단 평양시 참관(10/29, 평양방송)

- 시리아 정부경제대표단이 29일 만경대를 방문하고 평양방직공장, 만수대창작사 등을 참관했다고 평양방송이 29일 보도

● 佛특사, 방북 선발대 평양서 활동중(10/28,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자크 랑 대북정책 특사의 11월 방북을 앞두고 선발대가 이미 북한 평양에 도착해 활동중이라고 랑 특사가 밝힘.
- 북핵 6자회담 참여국을 순방하는 일정의 하나로 미국을 방문중인 랑 특사는 뉴욕주재 프랑스 영사관에서 프랑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한 프랑스 대표단이 북한에 이미 도착해 있다”며 자신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랑 특사는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11월 9~10일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랑 특사는 이달 초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6자회담 참가국을 모두 방문해 북한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청취한 뒤 북한 문제 해결을 포함,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위해 프랑스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

● 北, 우간다 경찰훈련 지원하고 경작지 빌려(10/28, 자유아시아방송; 뉴비전)

- 북한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경찰간부 훈련 프로그램에 태권도 교관 등 무술요원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신문을 인용해 28일 보도



- 우간다 관영 언론인 뉴 비전은 “우간다의 마사딘에 위치한 카바일 경찰학교가 지난 9월부터 경찰 지휘관들과 정보기관의 요원들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 훈련 과정을 시작했다”며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요원들이 태권도를 포함한 무술 교육을 전담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 간부훈련엔 특히 우간다와 인접한 남수단도 참여하기로 했고 소말리아와 부룬디도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우간다뿐 아니라 주변국의 경찰들도 함께 참여하는 합동 훈련이 될 것이라고 보도해 이들 나라 경찰간부들도 북한 무술요원의 지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우간다 경찰 교육 지원은 작년 3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우간다 방문 때 체결된 북한과 우간다가 ‘교육협조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북한은 올해 봄부터 경찰과 경호요원을 훈련하기 위한 인력을 우간다에 지원, 북한은 우간다로부터 “대두와 쌀 그리고 뽕나무를 경작할 수 있는 땅과 훈련 요원들의 임금과 거주 비용 등 약 450만 달러에 해당하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우간다 현지 언론은 전언

● EU트로이카 대표단, 정치대화 차 방북(10/26, 조선중앙통신)

- 유럽연합(EU) 트로이카 대표단이 ‘북-EU 정치대화’ 참석차 2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클라스 프레드릭크 몰린 스웨덴 외무성 정치부총국장 겸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이 대표단 단장이라고 소개, EU 트로이카는 EU 순회의장국과 집행위원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대표단은 지난 3월에도 북한을 다녀갔고 1998년부터 거의 해마다 방북해 북한과 정치대화를 가졌고 2001년에는 첫 인권대화를 갖기도 했음.
- 북한언론은 종전에는 EU 트로이카 대표단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도 방북 목적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정치대화라고 밝힘.

3. 대남정세

● ‘디도스 공격’에 북한 체신청 IP 동원(10/30, 중앙일보)

- 지난 7월 청와대·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동원된 IP(인터넷 주소)가 북한 체신청이 사용해온 IP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30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9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IP 추적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고, 국회 정보위원들은 “지난 7월 발생했던 한·미 26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경



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선을 임대해 쓰는 북한 체신청의 IP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 신문에 밝힘.

● **정부, 北, 지원요청때 규모 언급 안했다(10/29, 연합뉴스)**

- 정부는 10월 16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식량 10만t을 요구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북한이 구체적인 품목이나 수량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힘.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시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은 우리에게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수석대표는 돌아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 검토 결과, 지난 26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옥수수 1만t과 분유 20t,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
- 그는 또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도착지 단서조항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언급, “분배 투명성 문제는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면서도 “(16일 접촉에서는)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

● **北매체, 南주민 26일 자진 월북(10/2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남한 주민 강동림(30)씨가 26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 월북”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이 27일 보도
- 방송은 강씨에 대해 “2001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남조선군 22사단 56연대 3대대 9중대 1소대에서 근무”했으며 “삼성 반도체회사 노동자로 있다가 퇴직해 의거하기 전까지 별교음의 어느 한 돼지 공장(양돈장)에서 일했다”고 설명
- 방송은 또 강씨가 군복무중 “여러차례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하여 의거하려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그는 자기의 의거 염원이 실현된 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못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그는 해당기관의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소개

● **북한산 모래·송이·무연탄반입 개별승인(10/27, 연합뉴스)**

- 앞으로 북한산 모래와 송이버섯, 무연탄 등 3개 품목을 반입할 경우 매건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통일부는 27일 “‘포괄승인 품목’이었던 송이와 모래, 무연탄 등 3개 품목을 ‘개별승인품목’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늘 ‘남북반출·반입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고 밝힘.
- 남북 교역에서 포괄승인 품목은 세관 신고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하지만 개별승인 품목은 반출입시 매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번 조치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5.25)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에 현금이 제공되는 남북교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임.



● **정부, UNEP 대북 환경사업에 2차 지원(10/27, 연합)**

- 환경부는 9월 유엔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에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쓰일 2차 기탁금 9억6천100만원을 신탁했다고 27일 밝힘.
-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환경부 예산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 총 40억원(환경부 20억원, 통일부 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UNEP 신탁기금에 기탁하는 형식으로 북한 내 환경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정부는 2007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UNEP과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을 체결하고 환경부 예산으로 1차 기탁금 10억원을 납입한 바 있음.
- 기탁금은 환경개발센터 역량강화, 환경교육과 인식증진, 친환경주택사업, 대동강 통합 수자원관리 등 4개의 시범사업에 우선 쓰일 예정임. 환경부 자체 예산을 활용한 신탁은 끝났으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신탁만이 남게 되었음. 환경부 관계자는 “기탁금이 시범사업에만 제대로 쓰이는지,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UNEP 등과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추가 기탁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다”고 언급

● **정부, 北에 옥수수 1만톤 지원 통보(10/26, 연합)**

- 정부는 26일 북한에 옥수수 1만을 지원하겠다고 통보,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지게 됨.
- 정부는 이날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 명의로 ‘지난 16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북측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감안해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옥수수 1만톤 분유 20톤,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 조선적십자회(위원장 장재언) 앞으로 보냈음.
- 형식상 지원 주체는 한적이지만 옥수수 1만톤의 구입·배송비용 약 40억원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 분유 20톤(1억5000만원 상당)과 의약품만 자체 마련한다고 정부는 밝혔음. 옥수수는 중국에서 구입해 곧바로 북으로 보낼 예정이며 실제 지원까지는 30~40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짐.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EU, 북한에 6자 회담 복귀 촉구(10/30)

- 유럽연합(EU)이 북한에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음.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북한을 방문한 EU 대표단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대표단은 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사실을 공개하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26일 평양에 도착, 이날로 5일 간의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음.

● “6자회담국 관료, 회담재개 모색”(10/30)

- 미국과 북한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 관료들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기간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기 위한 비공식 대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NEACD를 주관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의 수전 셔크 소장은 29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KPBS방송과 인터뷰에서 “6자회담 협상자들은 이번 회의를 대화 복귀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고 밝힘.
- 셔크 소장은 “그래서 우리(주최측)는 6명이 식사를 함께 하도록 한 자리에 앉도록 했으며, 그들은 많은 시간동안 비공식적인 접촉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함. 그는 “그들(북한)은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 원하고 있고, 우리(미국)도 분명히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양측은 회담 재개를 위해 다가서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함.
- 그는 그러나 “(회담이 재개된다면) 이번 회담이 성공적일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론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북한 핵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함. 셔크 소장은 북한 군부에 대해 “그들은 마치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같은 존재”라며 “그들은 6자회담을 좌초시켜서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더 많이 향유하려고 한다”고 비판함.



● “보즈워스, 내달 하순 방북” <요미우리> (10/29)

-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인 다음 달 하순에 북한을 방문, 북·미 협상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양측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전함.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 북한의 회담 복귀를 둘러싼 최종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관측함.
- 신문에 따르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은 지난 24일 뉴욕에서 열린 리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과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북핵 특사 사이의 회담에서 이뤄짐. 회담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의 회동은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한 사전 조정이 주요 목적이었음.
- 이 소식통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방북의 조건이었던 만큼 연내에는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미국 정부는 이 국장과 김 특사의 회담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의 대가 등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신문은 미국 정부가 비핵화 협의와 관련, 한일과 연대해 6자회담 틀 내에서 신중히 추진할 방침인데 비해 북한은 북·미협상을 통해 체제 보장 등의 대가를 얻어내려는 의향인 만큼 최종적으로 북·미협상에서 6자회담까지 진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北 이달 발사 단거리미사일 모두 실패” <RFA> (10/29)

- 북한이 지난 12일 실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5기의 발사시험이 모두 실패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북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29일 전함. 이 대북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로 발사한 KN-02 미사일 5발 가운데 “두발은 발사 직후 곧장 바다에 떨어졌고, 두 발은 표적을 맞히지 못했으며, 마지막에 쏜 미사일은 불발로 끝났다”고 방송은 보도함. 북한은 당일 오전 6시와 8시를 전후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오후 5시에서 6시30분 사이에 추가로 3발을 발사함.

● 글레이저 “대북제재 목적은 비핵화” (10/29)

-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대북 제재의 목적중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개최된 한·미문제연구소(ICAS) 주최 세미나에 참석, “북한과 관련된 제재의 목적은 국제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안보이익을 지켜내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안보이익은 “검증가능



- 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혀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노력에 협력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그는 북한이 제재대상 기업의 이름을 바꾼다든가 자국 외교관을 통한 비밀스러운 자금거래에 나서는 등 제재의 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과 관련, “그런 이유에서 제재는 북한(자금흐름)을 완전히 틀어막는다고 보다는 이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고, 수고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제재는 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며 대북정책이 제재일변도로 비쳐질 가능성을 경계함.
- 또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국제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면서 “북한이 이해해야 할 점은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금융사회에서 계속 기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국제기준을 지킬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함.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그간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과 함께 중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을 방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입 관련자금이 해당 국가 금융기관을 통해 오갈 수 없도록 각국 정부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활동을 해왔음.

● “美, 협상 통한 北 핵폐기 전망 낮게 봐”(10/28)

-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7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협상을 통한 북한 핵폐기 전망을 낮게 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함. 그린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만남을 가질 준비가 돼 있으나,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공공연하고도 대담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함.
- 그린 전 보좌관은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상태이며, 우리가 지나치게 의욕을 보일 경우 북한으로부터 얻을 것은 더욱 적어지고, 우리 동맹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함. 이어 그는 오바마 정부는 큰 틀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이 나쁜 선택을 남기길 원치 않으며, 북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함.
- 또 그는 “북한은 자신들이 대화에 복귀하는 대가로 제재해제를 원하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는 단순히 대화를 갖는 것만으로 제재를 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물렁(soft)하게 보이길 원치 않는다”고 분석함. 그린 전 보좌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이 얼마나 더 오래 살지는 그의 흡연량과 운동량에 달렸다”면서 “그러나 역내 의학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그의 사망확률이 매년 10%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함.

- 그는 “만약에 김 위원장이 흡연을 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을 경우, 사망확률은 올라갈 수 있다”면서 “내 판단으로는 김 위원장이 2-5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벌써 북한 장성과 다른 지도자들은 가까운 장래에 닥칠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함.

● 美관리, 北인권 6자회담 의제화 필요성 제기(10/27)

- 마이클 포스너 미국 국무부 민주·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26일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6자회담 내에서 의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힘. 포스너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가 세계 종교자유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맞춰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무부와 의회가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힘.
- 포스너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가 확대된) 6자회담과 더 광범위한 정치문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내가 국무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인권문제가 어디에서나 의제화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우리는 이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는 전략적 차원의 경제적 우려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우려와는 별개로) 북한처럼 (인권)상황이 열악한 경우에는 이를 의제화하는 것이 정말로 긴요하다”고 말함.
- 이어 그는 “구 소련 시절 반체제 인사들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폐쇄된 사회에 살면서도 무언가 나은 삶을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에서도 아주 가혹한 시스템에 도전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함. 그는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생명선을 제공하고,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며 “따라서 (인권문제를 의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함.
- 포스너 차관보가 북한 인권문제를 6자회담 내에서 의제화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경우, 방북단으로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를 참여시킬 것이라는 외교가 일각의 관측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임.

● “북핵 해법, 신뢰 있어야 실현”<中전문가>(10/27)

- 미국의 대북 ‘포괄적 패키지’론이든 한국의 ‘그랜드 바겐’론이든 “포괄적 로드맵을 일괄타결로 매듭지으려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김경일 베이징대학 교수가 27일 주장함. 김 교수는 이날 오후 평화문제연구소와 한스자이텔재단이 서울 세종호텔에서 은평구청 후원으로 공동주최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색’ 주제의 세미나에서 그동안 북핵 6자회담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견지해온 것도 ‘신뢰 부족’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핵문제 현황과 해결 전망’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신뢰가 쌓아지지 않는 한 북한으로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실얼음 위를 걷는 과정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 10위 경제권 한국, 2위 경제권의 일본을 상대로 대결을 펼치는 북한으로서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더라도 물에 빠지는 형국이 된다”고 ‘선 핵포기’ 제안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설명함.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 만큼 압박이 필요하다는 대북 제재론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제재와 봉쇄, 압력을 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역설적이지만 이 역시 방법만 다를 뿐,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모순된 논리”라고 지적함. 김 교수는 이날 국제사회의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매개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에도 주목함.
- 그는 “북핵문제가 커져온 과정은 동북아 질서구축의 주역들인 6자를 근대사 이후 전례없는 하나의 장에 집결시켜온 과정”이라며 “중국과 미국은 사실상 제2차 북핵위기 때부터 3자, 6자회담을 거치면서 역내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이뤄왔다”고 6자회담을 통해 중미관계가 강화된 것을 상기시킴. 또 “동북아의 주역인 한·중·일 3국이 아세안이라는 무대를 빌려 3국간 협력을 논의하다가 최근 (아세안이라는 무대없이) 단독으로 1차, 2차 정상회담을 갖고 이를 제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역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김 교수는 주장하고 “3국간 정상회의가 열리기 시작한 10년은 바로 2차 핵위기를 겪으면서 6자회담이 열려온 10년”이라고 덧붙였음.
- 이날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세션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북정책 추진상의 원칙으로 ▲성공에 집착한 조바심 제거 ▲한·미공조 유지 ▲북한의 유화조치는 전술적 차원임을 유념 ▲국민적 지지기반 확충 등 4가지를 제시함. 그는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한반도 정상화 정책이 돼야 한다”며 “‘비핵’으로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고 ‘개방·3000’으로 경제공동체를 만들려는 정책기조는 한반도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토론에서 하코다 데쓰야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이 “북·미관계가 정말 대화 국면으로 이행되면 가장 괴로운 입장에 놓이는 것은 한국”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 구사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통미봉남’이 과거 북한의 행동패턴 중 하나였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북한이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이명박 정부는 북·미 대화가 화끈하게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반박함.



나. 미·북 관계

● “보즈워스, 방북시 김정일과 대화 원치 않아”(11/1)

- 북한이 원하는 북미 간 고위급 대화를 위한 양측 간 물밑 접촉에서 미국 측은 대화의 장을 이용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타진하지 않았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일 전했다. 신문은 북수의 미국 내 북미협상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이는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과 연관해 북한이 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북핵 특사는 방미 중인 리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과 물밑 접촉을 벌여왔음. 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정권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전제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고,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방북에 의욕적이지만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 또 아사히(朝日)신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에 “6자회담 틀 내의 움직임”이라고 설명해도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달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6자회담 탈퇴를 주장한 종전의 태도에 비해서는 진전된 것이지만, 북한이 북미협상 이후 곧바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 한편,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이날 미국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조건으로 내건 6자회담 복귀에 대해 북한이 태도를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미국도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달 29일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인 다음 달 하순에 북한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양측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한 바 있어서 보즈워스의 방북과 관련한 보도에서 일본 언론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北측 종전에 비해 훨씬 긍정적”(10/31)

- “획기적인 돌파구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종전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리 근 북한 미국 국장 등 북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맨해튼에서 30일(현지시간)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북한 세미나가 끝난 뒤 미국 측 참석자들이 밝힌 소감임.
- 세미나는 리 국장이 북한의 북·미 양자 대화와 6자 회담 전망에 대한 기초 발언을 한 후 참석자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약 7시간 동안 진행됐음.
- 회의가 끝난 뒤 주최 측인 조지 슈워브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회장, 이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북한 문제 전문가인 도널드



자고리아 헌터대 교수, 한때 스티븐 보즈워스와 대북 특사 경합을 벌였던 윈스턴 로드 전 주중대사 등 4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 리비어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측 대표단의 기본적인 대화 태도와 톤, 분위기는 지난해 세미나때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면서 “매우 생산적이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 6자회담의 재개 또는 핵사찰 등에 대한 특별한 돌파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 로드 전 주중대사는 “북·미 간 접촉에서 어느 쪽도 서로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분위기는 몇 달 동안 우리가 봐온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북측 인사들로부터 최근의 냉각기를 깰 만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리비어 회장은 “보즈워스의 방북으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재개하고, 6자회담에 돌아오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아주 적절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매우 신중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슈워브 회장은 “이런 세미나가 계속 열리게 되면 상호 신뢰와 믿음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비공식적 대화는 상호 이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北, 최근 KN-02 시험발사는 KN-06 개발 목적”(10/31)

- 북한이 지난 12일 실시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5기의 시험발사는 기존의 KN-02보다 사거리가 긴 고성능의 KN-06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가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했다.
- 베넷 박사는 “북한이 발사한 5발의 KN-02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는 고성능의 미사일(KN-06)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 발사의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02 미사일은 군사적 측면에서 성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변형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도 이같이 발사와 실패를 거듭하는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6시와 8시를 전후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오후 5시에서 6시30분 사이에 추가로 3발을 발사했었다.

● 리근 “유익한 대화 나눴다”(10/31)

- 미국을 방문 중인 리근 북한 미국 국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측 인사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공동 주



최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샌디에이고와 이곳에서 세미나를 했고,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성 김 대사와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성 김 북핵 특사 등 미 국무부 관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의 행보와 관련, “뉴욕에 가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다른 국무부 관리도 뉴욕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조지 슈워브 NCAFP 회장은 향후 뉴욕에서 리 국장과 성 특사 간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한 외교 소식통은 “성 김 특사가 뉴욕에 오지 않은 것은 뉴욕과 샌디에이고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접촉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대북 MD회의론자 美백악관 MD담당관에 지명돼<RFA>(10/30)

- 북한의 대미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회의적인 필립 코일 국방정보센터 선임연구원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을 다루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담당 부국장에 지명돼 앞으로 미국이 구축중인 MD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코일 지명자는 그동안 줄곧 무기 획득과 성능분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중인 MD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왔음. 그는 지난 2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관한 미사일방어의 미래에 관한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사일로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며 오히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었다고 방송은 상기시킴.
- 그는 “이란 역시 미국과 유럽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며 “북한과 이란 둘 다 분별없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유럽과 일본, 미국에 대한 공격이 대규모 보복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또 MD의 성능 자체에 대해서도 실제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만한 실전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함.

● “美, 北과 비공식대화 늘려야”<美전문가>(10/30)

- 북한 문제는 제재가 아닌 경제적 접근 방법으로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함.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의 수전 셔크 소장은 29일 외교잡지 포린폴리시(FP)에 아시아소사이어티 존 딜러리 연구원과 함께 기고한 글에서 제재를



통해서는 “결국 북한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제적 지원과 관여(economic engagement)’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힘.

- IGCC는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다자간 회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샌디에이고에서 주관한 바 있음. 셔크 소장 등은 북한이 일시적이었지만 시장개혁 실험의 역사가 있고 최근 북한 사회의 밑에서부터 변화 움직임이 있다면서 미국 정책당국자들은 북한이 외국으로 나와 성공적인 시장경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들은 이를 위해 NEACD와 같은 형식의 비공식 대화가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대학과 연구소, 비정부기구들이 북한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미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 사람들이 외부세계와의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비자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음.
- 이들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를 확대하는데 많은 정치적 자산과 재능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제 북한 경제, 나아가 북한의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함.

● 美 “북·미 아무진전 없었다는건 아니다”(10/30)

- 미국은 29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특사와 북한 외무성 리 근 국장과의 일련의 접촉에서 일부 진전은 있음을 시사함.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말부터 이뤄진 잇단 북·미 접촉 결과와 관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미 정부 당국자의 전날 언급에 대해 “이 접촉들을 규정지를 준비는 돼 있지 않지만, 이것이 아무런 진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 켈리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지난 24일 뉴욕 북·미접촉과 26~27일 샌디에이고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과정에서 이뤄진 비공식 접촉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됨. 이와 관련, 북한이 북·미대화의 의제와 형식 등에서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일각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협상 파트너로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안을 받기로 하는 등 일부 탄력적 입장을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켈리 대변인은 그러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아무런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함.
- 그는 다음달 하순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하는 쪽으로 북·미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일본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보즈워스 대표 초청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힘.



그는 “구체적 양자회담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없었고, 이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발표도 합의된게 없다”고 말함.

- 그는 리 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뉴욕에서 열릴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북한 문제 토론회에 성 김 특사가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국무부 관계자는 “성 김 특사가 국무부 내 사람들과 마주앉아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국무부 내부 논의가 진행중임을 내비침.
- 그는 또 동북아 협력대화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했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게오르기 톨레라야 박사가 ‘북·미간 분위기가 수개월전보다 훨씬 좋았다’고 전한데 대해 “어떤 경우든 마주앉아 서로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면서 “북·미간 분위기가 수개월전보다는 확실히 훨씬 나아진 것 아니냐”고 반문함.

● <실망한 美, 대북압박?>(10/29)

-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간 공식접촉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실망감이 묻어나고 있음. 미 정부 당국자는 28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성 김 특사와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간에 이뤄진 일련의 연쇄 접촉 결과에 대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해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을 시사함.
- 성 김 특사와 리 근 국장은 지난 24일 뉴욕에서 양자회동을 가진 뒤 26~27일 샌디에이고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함께 참석, 비공식 접촉을 이어감. 미 정부 당국자가 북·미간 접촉 결과에 대해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처음임.
- 당초 북한은 리 근 국장의 방미를 통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앞서 6자회담 복귀 약속 등 북·미대화의 형식과 의제 등에서 탄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왔음. 실망감 때문인지 미 국무부는 이날 성 김 특사의 뉴욕 추가 방문 문제에 대한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힘.
-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은 성 김 특사가 30일 뉴욕에서 열리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의 북한문제 토론회 참석을 기정사실화 했고, 북한과의 추가 양자접촉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었음. 국무부 관계자는 “뉴욕 회의에 미국측 관리가 참석하기는 하겠지만, 성 김 특사가 갈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면서 “성 김 특사가 뉴욕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함.
- 이런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입장 변화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경우 북한의 몸값만 올려줄 추가 회동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냐는 회의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임. 예상을 깨고 뉴욕에서의 2차 양자회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미대화 개최 문제는



한동안 난기류를 탈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표면적인 미국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뉴욕에서의 2차 양자접촉을 점치는 관측이 많음. 미국의 강경한 태도도 대북 압박용이라는 것임. 북한의 그동안의 협상 태도로 봤을 때 처음부터 가져온 카드를 다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음달 2일 미국을 떠날 리 근 국장이 막판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던져줄 수 있고, 미국도 이를 확인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임.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성 김 특사를 뉴욕에 보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힘. 다른 미국 소식통은 “지금까지 봤을때 북한은 뉴욕필하모닉의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으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방문과 같은 문화·학술 교류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의 관심을 핵대화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북측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실제 이번 북·미 접촉에서도 북측은 북한 교향악단의 뉴욕 답방 문제를 언급했다는 얘기도 있음. 북한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해 왔음.

● 美, 北테러지원 재평가 의무화(10/29)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북한행위보고서’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함.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2010 회계연도(2010 10.1~2011 9.30) 국방예산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함. 북한의 지난 4월과 5월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와 관련, 테러지원국 지정여부를 재평가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에 따라 북한행위보고서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북·미 양자대화가 임박하거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이 법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30일 이내에 북한을 법적 기준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2008년 6월26일 이후 북한의 행위를 조사한 상세보고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테러행위와 테러범 및 테러조직을 지원한 증거가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제출해야 하며 북한이 2008년 6월 10일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범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조사해야 함.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북한이 테러리스트나 테러행위와 연계된 국가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무부 장관은 즉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함.



- 또 법적인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전반적인 테러지원국 지정이나 기존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효율성을 어떻게 떨어뜨리게 되는지도 점검하도록 함. 이와 함께 상·하 양원은 국방수권법에서 “북한의 행위는 동북아 및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미국은 대북 제재결의안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힘.
- 워싱턴의 한 고위외교 관계자는 “북한의 테러지원 여부에 대한 재평가 의무규정을 법제화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등에 대한 공화당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으로 보인다”며 현상황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함.

● “北, 북·미대화서 대화 외 얻을게 없어야” <WP> (10/27)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서도 대화 그 자체 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면, 북한이 시도하는 또 한차례의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WP) 신문은 27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핵대화 재개를 위해 보상할 것인가’라는 부제가 붙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기(Mr.Kim’s scam)’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유화공세 배경과 목표, 미국의 대처방식을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함.
- WP는 “김정일이 올해 1월 오바마 행정부를 피어들여 과거 클린턴, 부시 행정부로부터 챙겼던 것처럼 돈벌이가 되는 부당거래를 하려 결심했다면, 지금이 사기를 위한 새로운 행동을 할 때라고 느낄 수 있다”며 현재의 북한문제 국면을 설명함. 그러면서 북한은 대개 미사일 발사, 핵사찰관 추방, 핵실험 및 추가생산 공언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뒤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정치·경제적 양보를 대가로 핵프로그램 동결·해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패턴을 밟는다고 설명함.
-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은 미국을 비롯,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현금과 외교적 인정 성과를 챙긴 뒤, 결국 핵무기 및 그 생산수단을 폐기하기 위한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약속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WP는 “북한은 최근 9개월 동안 핵실험, 미사일 발사, 영변 핵시설 재개 등으로 이 계획의 첫번째 수순을 이행했다”며 이달 초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6자회담에 앞선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하며 다음 수순인 유화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함.
- WP는 북·미 양자대화는 북한의 지속적인 목표라면서 “미국이 양자대화에 응한다면 김정일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기 전에 ‘진전(progress)’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힘. 그 ‘진전’은 오바마 행정부의 ‘뇌물(bribes)’을 의미하며, 그것은 대북제재 완화이거나 미국의 북한체제 인정 등



이라고 WP는 분석함.

- WP는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그런 ‘뇌물’을 주지 않는다면 김정일은 6자회담 무산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며 비난하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함. 미국의 대처 방식과 관련, WP는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일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고, 지난 주말 북·미 외교관들의 예비접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북·미 양자회담 요구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함.
-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6자회담 복귀와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무부 입장을 소개하며 “미 당국자들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중 양국은 북한이 보상을 받기 이전에 불가역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함.
- 지난 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관계정상화가 없다”는 발언은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함. 그러면서 WP는 “그것이 북·미 양자대화에서 김정일이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얻을 것이 대화 그 자체 말고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북한의 또 한 차례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美,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9년째 지정(10/27)

- 미국 국무부는 26일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얀마(버마),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함.
- 이에 따라 북한은 2001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뒤 올해까지 9년째 연속 종교탄압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음.
-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북한 헌법은 종교적 신념을 자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조사기간에 북한에서 극도로 빈약한 종교자유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한국통일연구소 2009 백서를 인용해 북한이 대외 선전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승인된 종교 단체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의 종교집회 장소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북한의 종교 현실을 소개함.
-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최근 수년간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한 조사와 억압,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 특히 보고서는 남한 내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인용해 북한 여성 ‘리현옥’이 중국 국경지대 근처 룡천에서 성경을 나눠주다 붙잡혀 공개처형된 적이 있다고 전함.
- 보고서는 “15만~20만명이 종교적 이유로 정치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던 탈북자들은



종교자유를 이유로 수감된 경우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다자포럼을 통해 북한의 우려스런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유엔총회는 작년 12월 북한의 광범위하고 중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종교자유와 관련, “한국 정부는 종교자유를 일반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2008년 8월에는 수만명의 불교도들이 정부의 차별을 주장하며 항의를 했다”고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진 종교편향 시비의 내용을 전함.
-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면서 “조계종 대표가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말함. 또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올 4월1일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465명이 수감돼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보고서는 국방부가 대체복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점도 지적함. 국무부는 1998년부터 관련법에 의거해 미 의회에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매년 9-10월 보고서를 발표한 뒤 해당국의 개선 여부 등을 반영해 다음해 초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을 공식 지정함.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의해 통상 분야 등에서 제재를 받게 됨.
- 이번 보고서의 조사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의 의미에 대해 “종교의 자유는 모든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가치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가치”라고 밝힘.

● <북·미 신경전..美 내부변수 관건>(10/27)

- 국제적인 관심 속에 이뤄진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성 김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간 1차 뉴욕 비공식 접촉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27일 “북한 측이 이번 접촉에서 기존의 얘기를 되풀이했으며 미국도 기존의 입장을 북한 측에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함.
- 미측은 특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 조기 천명 ▲기존의 비핵화 합의 이행 ▲협상대표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참가 ▲6자회담 틀 내의 북·미 양자대화 진행이라는 주요 원칙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또 협상 장소도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나서는 만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이 사실상 확보돼야 평양행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짐.
- 다시 말해 이런 조건이 성숙하지 않을 경우 평양보다는 제3국에서 양자대화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피력한 셈임. 이와 관련,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레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는 이 만남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6자회담 재개가 최선의



- 방안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북측에 설명했다”고 전함.
- 이에 대해 북한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밝힌 대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대화 참여 용의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앞으로 양측이 리 국장의 미국 체류 기간에 몇차례 더 접촉의 기회를 갖고 점점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임. 이 때문에 미국이 흔들림없이 견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배경에 대해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학습효과가 축적된 결과이자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입지 등을 두루 감안한 결과”라고 해석함. 북한에 대한 학습효과와 경우 지난 북핵 협상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협상 초기부터 주도권을 북한에 내주지 않아야 제대로 된 협상을 펼칠 수 있다는 판단을 미 정부내 정책책임자들이 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협상전술상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미국의 행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관심이 가는 대목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입지 부분임. 외교소식통은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자 젊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외교경험이 부족한 점이 취약점으로 인식돼왔다”면서 “따라서 그가 북한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자칫 그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을 오바마 참모들은 가장 주의할 것”이라고 말함.
 - 결국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은 북한과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내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노련한 내공’을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임. 이 소식통은 “현재 미국 내부, 특히 보수 언론이나 공화당 측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주목해야할 요소”라며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선택을 할 입지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함.
 - 이에 따라 리 근 국장의 방미 행보가 끝나고 북한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뒤인 다음 달 중순께 미 정부가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모종의 결정을 내릴 것이란 게 외교가의 분석임. 물론 그 결정의 방향은 북한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양태가 달라질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포괄적 패키지’를 앞세우고 협상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과 과감한 거래를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끝내 ‘오바마의 제의’를 거부할 경우 과거 부시 행정부 때와 패턴은 다르지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임.



다. 중·북 관계

● 北, 상하이 세계박람회 준비위 구성(11/1)

- 북한이 내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참가를 위해 구본태 무역성 부상을 총대표로 하는 비상설준비위원회를 구성했음.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31일 “조선이 2010년 5월에 개막되는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무역성 구본태 부상이 상하이 세계박람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구총대표로 선출되고 비상설준비위원회가 조직됐다”고 밝혔음.
- 또 북한 최고의 설계기관인 백두산건축연구원이 박람회 전시장 설계를 완성하고 11월부터 전시장 내부 공사에 들어감. ‘대동강 문화에 토대하여 번영하는 평양’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지는 전시장은 내년 3월 시험운영에 들어가 5월부터 정식운영함.
- 전시장은 평양의 모습을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한 대형 전경화로 보여주고 대성산성과 고구려 벽화무덤을 비롯해 평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품으로 만들어짐.
- 조선신보는 “전람회 개막식에는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이 계획되고 있다”며 “박람회 기간인 9월6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날’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도 고위급대표단이 파견된다”고 소개했음. 이 신문은 “박람회 기간에 진행될 예술공연과 우표전시회, 수공예품 및 도서전시회, 기업상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준비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최태복 방중 마무리..귀국(10/31)

-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31일 4박5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음. 최 비서를 단장으로 한 노동당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떠났음.
- 최 비서는 27일 베이징에 도착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선전부장 등을 만났으며 명문 대학인 칭화(淸華)대와 중관촌(中關村) 과학기술단지 등을 방문했음. 28일에는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예방, 북중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최 비서 일행은 29일부터 30일까지 중국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廣東)성을 시찰하면서 후 주석의 측근인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당 서기와도 만난 뒤 베이징으로 돌아왔음. 베이징 소식통들은 “최 비서의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산당과 노동당 사이의 정기적인 고위급 교류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음.



● 北-中, 나진·청진항 합작개발 나서나(10/30)

- 중국이 북한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 대북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가운데 지린(吉林)성 정부 대표단이 최근 북한 함경북도와 나진선봉시를 방문해 청진항과 나진항 합작개발 방안을 논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한창푸(韓長賦) 성장(省長)을 대표로 하는 지린성 정부 대표단이 지난 26-27일 함경북도와 나진선봉시를 방문, 한홍표 함경북도 인민위원장과 김수열 나진선봉시 인민위원장 등과 차례로 만나 청진항과 나진항 공동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린성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청진항과 나진항 공동 개발 방안은 물론 북중 접경지역 다리 보수, 북중 접경지역에서 나진과 청진항에 이르는 도로건설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며 “나진항 공동개발을 포함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또 경제무역 합작과 변경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북중수교 60주년과 북중친선의 해를 맞아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키로 약속했음.
- 대북 전문가들은 이달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북한과 체결한 경제 협력 방안에 이미 나진, 청진항 합작 개발 방안이 포함된 상황에서 지린성 정부가 북한의 지방당국과 만나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음.

● 北 최태복, 왕양 광둥성 당서기 만나(10/30)

- 중국을 방문 중인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29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당서기와 만남. 중국 광저우일보(廣州日報)는 30일 광둥성을 방문한 최태복 비서 등 북한 대표단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왕양 광둥성 당서기와 만났다고 보도함.
- 왕양 당서기는 광둥성의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별 발전 실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달성한 성과에 축하를 표시함. 그는 최태복 비서에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 아래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국제환경을 개선하며 자주 평화 통일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실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함.
- 이에 앞서 최태복 비서는 27일 베이징에 도착해 왕자루이 부장과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선전부장 등을 만났으며 명문대학인 칭화(淸華)대와 중관촌(中關村) 과학기술단지 등을 방문함. 그는 또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만나 김정일 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문제 등을 논의함.
- 최태복 비서 일행은 29~30일까지 중국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성에 머물면서 중국의 경제발전상을 체험하고 30일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31일 고려항공 편으로 귀국할 예정임.



● **中 후진타오, 北 김정일에 “편리한 시기 방중” 초청(10/29)**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중앙통신은 후 주석이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비서를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면담한 자리에서 최 비서에게 이러한 방중 초청 의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이 4년전 북한을 방문해 “열렬한 환대”를 받은 것을 회고했다고 설명함.
- 후 주석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에 이은 북한 노동당대표단의 방중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두 나라 관계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수교 60주년인 올해 “중조친선의 해”를 계기로 열린 경축행사들과 교류, 협조를 통하여 전통적인 중조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후 주석은 또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전통 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와 내왕을 가일층 확대하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조선 동지들과 함께 노력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힘.

● **中 청년 외교관들 북한 방문(10/29)**

- 중국의 젊은 외교관들이 북한 외무성의 초청을 받아 27일부터 31일 까지 4박5일간 북한을 친선 방문하고 있음. 중국 외교부는 29일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아주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 외교관 대표단이 27일부터 방북길에 올랐다고 밝힘.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청년 외교관 대표단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대표단은 외교부 관련부서의 젊은 외교관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함. 중국 청년 외교관 대표단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면담하고 북한 청년 외교관들과 교류활동을 벌이는 한편 묘향산과 관문점 등을 둘러볼 예정임.

● **北-中 경협 가속..北철광 확보 철도 건설(10/27)**

- 북한과 중국 간 경제 협력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압록강 대교 건설 합의, 남포항에 대한 중국 기업의 보세무역 허용에 이어 최근엔 북한 무산 광산의 철광 운송 확대를 위한 철도가 착공됐고 압록강에는 수력댐을 건설키로 양측이 합의함.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화룡(和龍)시와 난핑(南坪)을 잇는 철도 건설공사가 지난달 1일 착공됐다”고 밝힘. 중국 철도부와 지린(吉林)성 정부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11억9천만 위안을 투자, 건설에 나선 이 철도는 전체 노선이 41.68km에 불과하지만 북한 무역 관문인 난핑과 중국 동북의 내륙 철도망과 연결된 화룡을 잇는 철도



라는 점에서 주목됨. 난핑은 730억t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북한 무산 광산의 철광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통로임.

- 중국 당국 관계자도 이 철도 건설과 관련 “연간 120만t 이상의 무산 철광이 들어오고 있어 도로 운송만으로는 수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이 관계자는 “무산 광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비해 사전 기반시설 구축 성격도 있다”며 “신설되는 철도가 북·중 무역 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이 무산 광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 철광 생산을 확대할 뜻이 있음을 내비침.
- 통화강철집단 등 중국의 3개 업체는 2005년 무산 광산 50년 개발권을 확보, 연간 100만t 이상의 철광을 들여오고 있음. 중국과 북한은 최근 압록강에 2개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도 합의함. 양측은 지난 23일 지안(集安)에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인 입토와 문악 등 2곳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협약서를 정식 체결함.
- 총 9억 위안의 사업비가 투입될 이 발전소는 연간 3억800만 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중국은 물론 북한의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양측은 내년 3월 18일 발전소 착공식을 열기로 함. 사업비 투자나 전력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지린(吉林)성 통화(通化)현과 단둥(丹東)시가 27일 양 지역을 잇는 동북 경제 개방 선도구를 공동 건설키로 합의한 것도 북한 개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비쳐짐.
- 북한 접경에 위치한 양 측은 이날 선양 철도국과 창춘 해관, 단둥항 그룹, 통화강철그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둥과 통화를 잇는 도로, 철도망을 갖춰 동북지방의 물류와 무역, 관광산업을 주도할 개방 선도구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임.
-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들어 랴오닝연해경제벨트와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을 연결하는 두만강 개방 선도구 개발 등 낙후된 동북지역 진흥을 위한 동북진흥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음. 또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에서 출발해 지린성과 랴오닝(遼寧)성의 북한 국경지대를 거쳐 다롄(大連)까지 이어지는 총 1천 380km의 ‘동변도 철도’도 내년 7월 착공키로 함. 동변도 철도는 압록강과 두만강변인 투먼(圖們)과 단둥(丹東) 등 북한 접경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특징임.
- 중국 당국은 동북 변경지역의 산업 개조를 위해 추진중인 동북진흥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결국 북한이 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 포석에서 북한 개방을 염두에 둔 북·중 변경지역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음. 내년 8월 착공될 것으로 보이는 이 다리는 노후화된 기존 압록강 철교를 대체해 북·중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북한도 지난해 3월 중국 기업에 남포항 보세가공업을 허용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 의지를 내비침.



◎ <中 6.25참전 59주년..北 “북·중친선 강화”>(10/26)

- 중국인민해방군의 6.25참전 59주년을 맞아 북한이 양국관계 강화를 강조해 눈길을 끄.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희생성은 우리 인민에 대한 중국 인민의 열렬한 지지 성원의 표시였다”며 “그것은 중국인민지원군의 고상한 우의적 사명감과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진실한 협조정신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밝힘.
- 이 신문은 올해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김영일 내각 총리의 방중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을 거론하면서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조중 친선협조관계는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함. 노동신문은 “중국의 면모는 날을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그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인민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국 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함.
- 신문은 “조중 친선의 강화 발전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유익하다”며 “조중친선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음. 북한은 이날 ‘조중 우의탑’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창식 보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화행사를 갖기도 함. 중국측에서는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참석함.
- 행사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 공동명의 화환과 인민무력부, 외무성, 인민보안성, 무역성, 문화성 등의 화환도 전달함. 또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에는 북한 군부대, 형제산구역 당위원회 등이 현화를 하기도 함.
- 중국군은 1950년 10월19일 1차로 20만명이 압록강을 건너 참전해 10월25일 첫 전투를 치렀으며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17만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36만명의 인력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 과정에서 마오저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인 마오안잉(毛岸英)도 참전해 대유동 지원군 사령부에서 러시아 통역을 맡다가 미군의 공격으로 전사함.

◎ <中, 대북 무역통계 비공개..왜?>(10/26)

- 중국이 두달 연속 대(對)북한 무역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중국은 지난달에 이어 26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통계자료에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수치도 밝히지 않았음. 다만, 중국 해관총서(GAC)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아시아국”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통해 석탄과 원유, 석유제품, 곡류 관련 협상 내용을 명기해 북한과 거래가 있었음을 시사함.
-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적 거래 변화를 감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현재 북한은 무역과 원조 대부분을 중국에 의



존하고 있음.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대북 무역통계 비공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이 소식통은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과 관련된 무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더 이상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함.

- 또 다른 관리는 대북 무역 정보 누락이 “기술적 오류”에 의해 발생했다면서도 이 같은 문제가 고쳐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함.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의 방침 변화가 북한과 정치적,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남북관계가 경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점은 양국간 우호관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지난해 북·중 무역 규모는 1년 전보다 41.3% 오른 27억9천만 달러에 달했으나 올들어 지난달까지는 약 18억5천만 달러로 하락함.

라. 일·북 관계

● 日, 北화물 검사법 각료회의 의결(10/30)

- 일본 정부는 30일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함. 이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로서,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실시하도록 함. 당초 자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해상자위대의 화물검사 지원 조항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음.
- 이는 자위대의 국외 파견에 반대하는 연립 여당인 사민당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임. 정부와 여당은 현재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가결할 방침이고, 공명당도 찬성하고 있어서 내달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됨. 정부가 이날 확정된 법안은 선박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물품이 실려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상보안청이나 세관이 입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마. 기타

● 유엔에 北인권결의안 제출..韓 공동제안(10/31)

-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제출돼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 절차에 들어갔음.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음. 30일(현지시간)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유엔 사무국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했음.
- 이번 결의안에는 주제안국인 EU와 일본 외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음.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상정된 뒤 11월



20일을 전후해 표결을 통해 채택될 전망이다.

- 대북 인권결의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2월에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인 만큼 유엔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제출된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등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침해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에 대한 협조,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작년 결의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이번에는 인도주의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에는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한 뒤 2007년에는 논란 속에 다시 기권을 했고, 작년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음.

● “北 휴대전화 가입자 9월말 현재 10만명” <VOA>(10/31)

-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 9월말 현재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이집트에 본사를 둔 중동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EFG-헤르메스’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음. 이러한 추산치는 지난 6월 말 현재 4만8천명에 비해 석달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그 이전 3개월 동안에도 1만9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었음.
- 지난 8월 이집트의 또 다른 투자은행인 ‘나임 홀딩’은 올해 말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12만3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 말에는 31만명, 2011년 말에는 56만8천명 등으로 매년 2배 또는 그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음.

● 北에너지전문가들 유럽서 재생에너지 기술연수(10/29)

- 북한 ‘비재래식 에너지개발센터’의 재생에너지 전문가 4명이 최근 약 10일간 독일과 스위스의 대학, 연구소, 기업을 방문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 기술에 관해 연수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함.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캠퍼스 파워 크리스투스’의 스테판 부르크하르트 북한 담당관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스위스의 연방기술연구소를 비롯해 태양열과 풍력 발전기를 제작하는 회사 등을 방문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과 이를 사용하는 제품 등을 둘러본 뒤 전문가로부터 관련 기술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힘.
- 지난 26일 귀국한 이들 북한 전문가는 특히 가정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열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택을 설계하는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



는 기술과 에너지를 전력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해 유럽의 대학, 전문기관, 기업 등과 교류·연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佛특사 방북 선발대 평양서 활동중”(10/28)

- 프랑스의 자크 랑 대북정책 특사의 내달 방북을 앞두고 선발대가 이미 북한 평양에 도착해 활동중이라고 랑 특사가 밝힘. 북핵 6자회담 참여국을 순방하는 일정의 하나로 미국을 방문중인 랑 특사는 뉴욕 주재 프랑스 영사관에서 프랑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한 프랑스 대표단이 북한에 이미 도착해 있다”며 자신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함.
- 랑 특사는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내달 9,10일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랑 특사는 이달 초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6자회담 참가국을 모두 방문해 북한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청취한 뒤 북한 문제 해결을 포함,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위해 프랑스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임. 지난 18일부터 방미중인 랑 특사는 23일 워싱턴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성 김 북핵 특사를 면담하고 북한 핵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러시아 역사교과서 북한 체제 신랄 비판(10/28)

- 러시아 교육과학부가 올해 신학기(9월 개학) 슈콜라(초·중등 과정) 교과서로 승인한 한 역사교과서에 북한 체제를 신랄히 비판하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확인됨. 특히 러시아 교과서로는 처음으로 1960~70년대 북한 김일성 체제는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핵 문제까지 언급, 러시아인들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됨.
- 연합뉴스가 28일 입수한 이 교과서는 러시아의 대표적 교과서 전문출판사인 ‘프로스베세니에(계몽)’가 우리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1학년생의 2009년도 신학기용으로 만든 것으로 모스크바 국립대(엠게우) 역사 교수 3명이 공동 저술함. 이 교과서 제2장 ‘세계 양극체제 형성’ 편에 한국전쟁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북한의 남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다른 러시아 역사 교과서에 다뤄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하지만, 같은 장 ‘세계 사회주의 체제와 그에 대한 반발’이란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이 눈길을 끄. 1960~70년대 북한에서는 수정주의자로 비난받은 사람들을 공개 비판에 처하고, 체포해 교도소나 교화소로 보내 중노동을 시켰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고 기술함. 또 경제, 정치, 이념, 문화, 교육 그리고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상호관계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면이 국가와 노동당의 엄중한 통제 하에 놓였으며



- 북한 주민에게 김일성은 살아있는 신과 유사한 존재였다고 소개함.
- 이와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이 당과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선언됐고 북한 주민들은 공식 매체를 제외하고는 어떤 대중매체도 접근할 수 없었으며 각 매체는 끊임없이 김일성을 찬양했다고 적었음. 특히 제3장 ‘20세기 말-21세기 초 발전도상 국가들’ 편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대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기술한 북한 체제 비판은 파격적이라는 게 역사 전문가들의 평가임.
 - 교과서는 북한에서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정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이 국가를 지도하고 있고 경제는 완전히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고 설명함. 또 기업들은 경영의 자율성이 없고 기업들은 국가 계획에 의해 지도되며 이 계획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하고 생산품을 어디로, 어떤 가격으로 보낼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기술함.
 - 덧붙여 정치적 자유는 없으며 대중 매체는 가장 엄격한 검열을 받고 있는데 2천300만 주민을 가진 이 나라는 가난 속에서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외부와 완전한 격리된 채 살고 있다고 비판함. 김 위원장의 등장과 관련해 교과서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당과 국가 권력이 공식적으로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로 이양됐고 김정일은 기존의 질서를 신성불가침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함.
 - 특히 주변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언급은 교육 현장을 넘어 정치, 외교적 의미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교과서는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공격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민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함. 또 2002년 북한의 핵무기 제조 사실이 밝혀져 미국이 북한에 연료 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핵비확산 조약(NPT)을 탈퇴하고 2006년 7월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으며, 그해 10월에는 지하 핵실험을 해 유엔이 비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함.
 - 2006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가한 가운데 재개됐음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 중단 대가로 끊임없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교과서는 지적함. 이 문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한국’이란 항목의 글에서는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소개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음.
 - 모스크바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전통적으로 가깝다는 러시아 교과서에 이런 비판적 논조의 글이 실린다는 것은 의외다”라면서 “이는 러시아 학자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모스크바 슈콜라의 역사 교사인 슈쿠노바올가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껏해야 한국 전쟁에 대한 언급 뿐이었는데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을 실은 교과서는 처음이다”며 “러시아 역사 교사는 물론 어린 학생들조차 북한에 대한 시각이 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명을 요구한 또 한 명의 현지 역사 교사는 “러시아가 현재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한국전쟁에 대한 언급에만 그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다른 교과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함.

● 정부, UNEP 대북 환경사업에 2차 지원(10/27)

- 환경부는 지난달 유엔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에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쓰일 2차 기탁금 9억6천100만원을 신탁했다고 27일 밝혔다.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환경부 예산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 총 40억원(환경부 20억원, 통일부 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UNEP 신탁기금에 기탁하는 형식으로 북한 내 환경사업을 지원 하는 것임.
- 정부는 2007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UNEP과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을 체결하고 환경부 예산으로 1차 기탁금 10억원을 납입한 바 있음. 이후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된 국제 지원금이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핵개발을 둘러싼 남북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함.
-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축사를 통해 남북 간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면서 새 전기를 맞았음. 기탁금은 ▲환경개발센터 역량강화 ▲환경교육과 인식증진 ▲친환경주택 사업 ▲대동강 통합 수자원관리 등 4개의 시범사업에 우선 쓰임.
- 환경부 자체 예산을 활용한 신탁은 끝났으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신탁만이 남게 됐음. 환경부 관계자는 “기탁금이 시범사업에만 제대로 쓰이는지,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UNEP 등과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추가 기탁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다”고 말함.

● EU트로이카 대표단 ‘정치대화’차 방북(10/26)

- 유럽연합(EU) 트로이카 대표단이 ‘북-EU 정치대화’ 참석차 2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통신은 클라스 프레드릭크 몰린 스웨덴 외무성 정치부총국장 겸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이 대표단 단장이라고 소개함. EU 트로이카는 EU 순회의장국과 집행위원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대표단은 지난 3월에도 북한을 다녀갔고 1998년부터 거의 해마다 방북해 북한과 정치대화를 가졌고 2001년에는 첫 인권대화를 갖기도 함. 북한언론은 종전에는 EU 트로이카 대표단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도 방북 목적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정치대화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음.



● “남북정상회담서 북핵 의제돼야”(10/26)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6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핵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유 장관은 또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성 김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간 접촉에서 미국 측이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문제를 협의했으며 협의결과를 미측으로부터 설명 들었다고 말함.
-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언급,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개방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는 남북정상간 회담에서 언제나 의제가 돼야 한다는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함.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벤트성 행사이거나 정치적 의도가 되면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함.
- 유 장관은 북·미 접촉에 대해 “미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전제한 뒤 “미국측은 이번 접촉의 의미에 대해 북측에 설명했고 북측은 주로 경청했다”면서 “(북·미 접촉) 주제는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는 문제, 북한이 주장하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문제였다”고 소개함.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이 대북 문제에서 그런 원칙을 지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함.
- 유 장관은 북한이 리 근 국장을 미국에 보낸 이유에 언급, “북한 핵 문제가 북·미 양자간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 아래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그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문제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보즈워스가 방북한다면 (북·미 양자대화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라라고 주장할 소지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함.
- 북한이 2차례 핵실험한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말에 유 장관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우리가 맨 먼저 북한에 촉구할 것은 9.19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말함. 유 장관은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왜 그렇지 않다는 것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언급, “이는 인권과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일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물론 이것이 비핵화 진전을 막아서도 안 되겠지만 6자회담의 한 프로세스로서 이 문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토야마 일본 신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北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완성(11/1)

-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군의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작계 5029)을 완성했다”면서 “앞으로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한·미가 정리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고위 소식통은 “그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군당국의 계획은 개념계획(개념계획 5029)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해왔다”며 “최근 개념계획이 작전계획으로 완성됐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작전은 주변국 등을 고려해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캐피털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한 국제회의 초청연설에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미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WMD 또는 그 기술이 테러 집단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서 정변사태가 발생하면 핵무기와 핵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한·미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대비계획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했고 최근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 한·미는 작년 초부터 영관급 장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가동해왔다.
- 이 협의체에서는 전시 또는 유사시 북한의 WMD가 북한 영해와 영공, 영토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한사태 변화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는 유지하고 있지만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한 뒤 “우리 군은 북한의 사태변화에 따른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정부, 한·미FTA 관심 증가”(10/2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다음달 방한을 앞두고 미 정부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방안을 둘러싼 내부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28일 전해짐.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US) 트레이드’는 최근호에서 “수개월 전에 비해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명확하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함.
- 이 잡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달 아시아 방문과 한·EU(유럽연합) 간 FTA 체결을 그 이유로 들었음. 한국 순방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 처리 문제를 논의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이 잡지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지난 15일 한·미 FTA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전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 일부 관측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 전에 한국과 해소하고자 하는 미국의 우려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지시할 수 있다고 말함.
- 하지만 다른 관측통들은 건강보험 개혁 등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변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에 통상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 잡지는 전함. 오바마 대통령이 통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어떤 진전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집중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임.
- 이 잡지는 이같이 예상하는 관측통들 사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전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FTA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백악관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함. 또 미국 업계도 한·EU FTA가 미국의 수출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를 강조함으로써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한·EU FTA 체결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이에 앞서 미 업계 대표들은 지난주 대니 셰플베다 USTR 대표보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가 미국의 수출 확대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미 업계의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했다고 이 잡지는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업계 소식통들은 USTR가 어떤 식으로 FTA 문제들을 처리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함.

● 美외교협회 대표단, 정부인사 잇따라 접촉(10/27)

-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 대표단이 27일 한국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대북정책과 한·



미동맹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존 킬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미국외교협회 대표단은 이날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함.

- 프리처드 소장 일행이 만난 한국 정부 인사에는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짐. 이들은 또 이날 오후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하고 28일 오전에는 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과 만날 것으로 전해짐.
- 통일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 장관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접견실에서 CFR측 대표단과 면담했으며 이들이 미국의 대북정책, 북한 정세, 한·미동맹 등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연구과제 등을 설명하고 향후 통일부의 긴밀한 협력을 부탁했다고 밝힘. 정부 관계자는 “프리처드 소장을 비롯한 미국 한반도전문가 일행이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주제로 한 미국외교협회(CFR)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방한했다”며 “이들은 28일 서울포럼이 주최하는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한 뒤 29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함.
- 프리처드 소장은 빌 클린턴 및 조지 부시 행정부에 걸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국 선임국장, 대북특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 대표 등을 지냈고 킬러리 전 사령관은 1996년부터 1999년 12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함.

나. 한·중 관계

● 中, 해군 훈련함 한국행 출항(10/27)

- 중국 해군 훈련함인 정허(鄭和)호가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하기 위해 26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을 출발함.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정허호가 한국 해군의 초청으로 오는 29일부터 11월2일까지 5일간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하기 위해 다롄항을 출항했다고 보도함. 이 훈련함에는 해군사관학교, 해군공정대학, 해군항공학원, 다롄함정학원 등 해군 산하 교육기관 생도 230명 등 370명이 승선했으며 여생도도 16명 포함됐음.
- 훈련함 함장인 인민해방군 해군 부참모장 류이(劉毅) 소장은 “중국 생도 4명이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 2, 3일간 훈련을 받는 등 각종 교류 활동을 벌인다”고 말함. 정허호는 한국 방문에 이어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일본의 쿠레 해군기지를 방문함. 정허는 600여년 전 해외 항해에 나선 중국 탐험가의 이름임.



다. 한·일 관계

● 하토야마 “선박 충돌 한일관계 배려하라”(10/29)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한국 화물선의 충돌사고와 관련,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에게 한일 관계를 배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이 29일 보도함. 하토야마 총리는 28일 국회에서 기타자와 방위상으로 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구라마호와 한국 화물선 카리나스타호의 충돌 사고 조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함.
- 하토야마 총리는 한국 화물선이 해상보안청 관제소의 지시에 따라 항로를 변경하다 충돌사고가 난데 대해 “한일 관계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함. 이는 충돌 원인 조사 과정이 한국 화물선에 불리하게 전개되어서는 안되며 편견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한국 측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됨. 일본 해상보안 당국은 후쿠오카(福岡)현 간몬(關門)해협을 감시하던 해상교통센터 관제소가 27일 사고 직전 한국 화물선으로부터 전방의 선박을 추월하겠다는 신호를 받고 오른쪽으로 우회하도록 지시했고 한국 화물선은 이 지시에 따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 일본 호위함과 충돌했다고 밝힘.

라. 미·중 관계

● 美·中, 국방·통상회담 동시 진행(10/2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국방 및 통상 분야의 회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이중 국방 분야는 미국에서, 통상 분야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음. 쉬차이허우(徐才厚)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군사·국방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다짐함.
-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 국방 지도자가 이번 회담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해 7개 분야의 협력에 합의했다”고 28일 보도함. 양국은 게이츠 국방장관이 내년 중국을 방문하고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상호방문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분야, 군 의료분야, 군 문화·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급 교류도 심화시키기로 함.
- 또 국방 분야의 외교채널 및 해군의 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 시스템도 구축키로 함. 미국과 중국은 2년전 게이츠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군사 부문에서 전략대화를 시작했으나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중국 남해 정찰, 미국이 중국의 국방분야 불투명성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음.



- 쉬 부주석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처음으로 중국에 공개되는 네브래스카 오마하의 전략사령부를 비롯해 중국을 작전권에 둔 태평양사령부, 육·해·공 사령부, 해군사관학교를 두루 시찰함.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에서 경제·통상 분야 회의도 개막함.
- 양국은 29일 저장성(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경제, 통상,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제20차 통상무역위원회(JCCT)를 시작함.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 중국은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대표를 맡았고 미국은 게리 로크 상무장관,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톰 빌색 농무장관이 공동 대표를 맡았음.
- 이번 회의는 미국이 지난달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양국이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열린 것으로 악화된 무역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됨.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12일부터 19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서 15~18일 나흘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 게이츠 “美-中 지속적 군사대화 중요”(10/28)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이 쉬차이허우(徐才厚) 중국 인민해방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접견하고 미-중간의 지속적인 군사대화 의지를 밝힘. 게이츠 장관은 27일(현지시각) 쉬 부주석을 미국 방부 본부에서 1시간 15분간 접견하고 양국간 군사대화 필요성을 강조함. 게이츠 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쉬 부주석은 2006년 이후 방미한 중국군 간부 중에서는 최고위급임.
- 국방부의 제프 모렐 대변인은 쉬 부주석이 이 자리에서 게이츠 장관의 답방을 요청했고 장관은 중국 측의 초청을 수락했다면서 회동이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모렐 대변인은 이어 과거 양국간 군사적 대화가 진전을 보이고 친선 방문을 통해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면 곧 거북한 문제가 터져 대화 국면이 경색되고는 했다면서 게이츠 장관이 쉬 부주석에게 “양국간 군사적 대화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끊겼다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함.
-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관리는 이날 회동에서 쉬 부주석이 대만을 둘러싼 긴장과 중국해에서의 미 해군의 첩보수집 활동 양국간 군사적 교류를 가로막는 오랜 “장애물”들을 언급했다고 전함. 그러나 이 관리는 미국이 중국 측에 전달한 광범위한 메시지는 양국간 군사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고 강조함.
- 그는 “이러한 정책 불일치에 대해 (양국은) 적절한 환경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양국 관계를 해치거나 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행동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함.



마. 미·일 관계

● <하토야마 대등외교 강조..美日갈등 불씨>(10/30)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지난 29일 국회 답변에서 미·일 동맹 재검토, 주일미군 경비 부담액 감축 등의 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미·일 간 이상기류가 확대되는 양상임. 아시아를 외교의 한 축으로 제시한 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 언론이 “반미적이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된 양국 긴장 관계가 수습되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정책 분야에까지 파급되는 양상임.
- 물론 내달 1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등 양국간 이견에 대한 사전 절충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관측도 있었음.
- 그러나 이들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방일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 정부의 비행장 이전지 재검토에 대해 “중전 합의를 존중하라”며 오바마 대통령 방일 이전에 결론을 내라고 압박, 양국간 긴장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함.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전지역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고 미국 언론에는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라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성토 기사가 속속 게재됐음.
- 이런 상황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29일 국회에서 내년이 미·일 안전보장 협정 개정 50년이 되는 것과 관련, “동맹의 방식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리뷰(재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함. 물론 지난 8·30 총선 공약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을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미국 내의 시선이 급지 않은 때에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데 대해 여권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 그는 같은 날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미·일 동맹을 당연히 중시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파문 확산을 경계했지만 “주일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예산지원을 비롯해 미·일 지위협정, 후텐마 비행장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중전 입장에서 후퇴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이런 일련의 발언이 미·일 간에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미국측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 주무 부처인 외무성 관리들은 하토야마 정권의 탈관료 선언을 의식,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음.
- 그러나 한 간부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위협정까지 포함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함. 외무성 출신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拓殖)대 대학원 교수는 “지금 하토야마 총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동맹 재검토보다는 양국이 직면한 현안을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비롯한 주일미군 재편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다음이 아프가니스탄 문제”라고 말함.

- 그는 “그럼에도 하토야마 총리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뒤에 미국의 압력을 받아 대책을 내놓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토야마 총리의 위기감이 결여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함.

● “日 하와이 상공서 미사일 3분만에 요격”(10/29)

- 일본 해상자위대는 27일 미 해군의 협력 아래 하와이 연안에서 이지스함을 이용한 중거리 미사일 요격실험을 실시, 2차례에 걸쳐 목표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이 28일 발표함. 이번 실험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배치형 미사일방어(BMD) 체제를 이용해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3번째 사례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미사일방어 능력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임.
- 이날 실험에서 최근 성능을 높인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JS MYOKO (DDG-175)는 하와이 카우아이섬 바킹샌즈에 있는 태평양미사일 훈련장에서 시차를 두고 발사된 중거리 미사일 2기를 탐지, 추적한 뒤 SM-3 미사일을 발사, 3분만에 160km(100마일) 상공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데 성공함.
- 요격실험에는 진주만을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구축함 ‘레이크 이리’호와 ‘폴 해밀턴’호도 참가해 목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등 요격 시뮬레이션 활동을 벌임. 미사일방어국은 이번 요격실험에 대해 “미사일방어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강화되고 있는 협력관계를 보여준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요격 실험을 수행한 구축함에는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돼 있으며 일본으로 귀환 전 SM-3 요격미사일을 추가 장착할 것으로 알려짐.

● 日방위상, 후텐마 기존안 수용시사(10/27)

-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논란을 빚고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의 이전과 관련, 기존의 미일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함. 기타자와 방위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후 기자회견에서 후텐마 비행장을 같은 오키나와현내 나고(名護)시로 이전하는 기존 계획이 국외 또는 오키나와현외 이전을 내세운 민주당의 정권공약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밝힘.
- 이는 자민당 정권과 미국이 이미 합의한 나고시로의 이전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함. 기타자와 방위상은 ”방위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밝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전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오카다 가쓰야



(岡田克也) 외상 등과 협의를 할 방침임을 시사함.

- 기자와 방위상은 기존에 합의한 주일 미군의 재편 로드맵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8천명의 광 이전과 미군 급유기의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로의 이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현외, 국외 이전’을 상당부분 담고 있다”고 말함. 이는 기존 미일 합의대로 후텐마비행장을 나고시로 옮겨도 민주당의 정권 공약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어서 주목됨.
- 오카다 외상이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는 오키나와현내 가데나(嘉手納) 기지와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축함. 기자와 방위상은 내년 1월 활동이 종료되는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와 관련,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에 나선 각국 함대에 인도양에 파견된 해상자위대를 보내 급유활동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日, 주일 미군 지위협정개정 요청 검토(10/26)

- 일본이 자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군 지위협정의 개정을 미국 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6일 보도함.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는 살인 등 미군이 저지른 흉악 범죄 용의자의 기소전 신병인도와 관련, 일본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두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쪽으로 미군의 법적 지위 협정의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수사방법에 대해 수사 전과정의 녹음과 녹화가 되지않고 있다며 일본 측의 미군 지위협정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의 수사방법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만큼 수사과정의 녹음·녹화가 필요하며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하토야마 총리는 다음달 일본을 방문하는 벅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런 의향을 전할 방침이지만 오키나와(沖繩)에 있는 미군의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군 지위협정 문제는 다음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음.
- 일본 정부는 미군 지위협정 개정과 관련, 미군에 재판권이 있는 공무 중의 범죄와 사건이 기지 외에서 발생한 경우 일본 측에 재판권을 넘기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또 미군 기지내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바. 기타

● 슈뢰더 전독일 총리 3~5일 방한(11/1)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3~5일 방한한다고 주한 독일대사관이 1일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방한 기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3~4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인재포럼 2009’에서 기조연설할 계획이라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 한스-올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4일 오후 6시 서울 성북구 성북동 독일대사관저에서 슈뢰더 전 총리를 위한 환영 리셉션을 개최함.
- 사민당 출신인 슈뢰더 전 총리는 1998년 독일 보수 정치의 거목 헬무트 콜 전 총리를 꺾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으며 2005년까지 연방총리를 역임했음.

● 美적십자, 한적에 한인 이산가족 상봉 협조 요청(10/31)

- 미국 적십자사가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의 북한 가족 상봉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아비 위버 미국 적십자사 수석공보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 위버 공보관은 “남과 북의 적십자사가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한 직후 미국내 한인도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을 하고 상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의 적십자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적측은 한적이 운영하는 ‘이산가족통합센터’에 한인 이산가족의 정보를 등록해 생사확인하고 상봉신청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RFA는 보도했음.
- 이에 대해 한적 관계자는 “미국 적십자사로부터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에 재미 한인 이산가족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 문의가 왔지만 미국 시민권자를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적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적십자측에 남북간 상봉이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 적십자회와 접촉해볼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 위버 공보관은 북한 적십자회의 반응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내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남북 적십자사와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시진핑 군사위 진입 4중전회 직전 취소”(10/30)

- 지난 9월 중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중앙군사위부주석 겸임 문제를 다루려 했다가 4중전회 개막 직전에 이를 취소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홍콩 시사월간지 경보(鏡報) 11월호를 인용



해 29일 보도함. 친중국계 잡지인 경보는 4중전회에 참석한 중국공산당 당조직 건설부문의 복수 전문가를 인용해 이같이 전함.

- 중국 지도부는 당시 시진핑 부주석의 중앙군사위 진입이 취소된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잡지는 소개함. 경보에 따르면 소식통은 “시진핑 부주석이 4중전회에서 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되지 않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며 “시 부주석이 적당한 시기에 군사위 부주석에 취임할지 모른다”고 밝힘.
- 하지만, 일부 비중국계 홍콩 매체들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시 부주석이 군사위 부주석을 겸임함으로써 차기 최고지도자로 사실상 확정되는 것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측이 저지했다고 분석해 주목을 끌고 있음.
- 4중전회를 앞두고 외신들은 시 부주석이 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9월 18일 회의 폐막 직후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된 회의보고서(공보)에는 공산당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고 인사 안건은 포함돼 있지 않아 중국의 후계 지도부 구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는 억측이 난무함.
- 이를 의식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지난달 22일 일부 외신을 상대로 4중대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의에서 인사 변동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시 부주석의 인사 문제는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함.

● 中동북 경제협력 활발..‘대동북’ 구상(10/29)

- 중앙 정부의 동북진흥책에 힘입어 성장 발판을 마련한 중국 동북지역 도시들 사이에 경제 협력 ‘짜짓기’가 활발함. 다롄(大連)과 단둥(丹東), 진저우(錦州), 잉커우(營口), 판진(盤錦), 후루다오(葫蘆島) 등 6개 도시는 최근 랴오닝 해변도로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단둥선언’을 채택함. 이들 도시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단둥에 ‘랴오닝 해안도로 6개 도시 관광연합체’를 설립함.
-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랴오닝경제벨트의 거점인 이들 도시는 지난 9월 중국 최장의 해안도로인 빈하이(濱海)도로(총 연장 1천443km)가 개통되면서 연결됐음. 이 해안도로 개통으로 랴오닝 반도 유명 관광지 133곳이 연결되면서 랴오닝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떠올랐으며 6개 도시는 이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공동으로 나설 계획임.
- 지린(吉林)성 통화(通化)현과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도 최근 양 지역을 잇는 동북 경제 개방 선도구 건설에 합의함. 북한 접경에 위치한 양측은 단둥과 통화를 잇는 도로, 철도망을 건설하는 등 경제 협력을 통해 동북지방의 물류와 무역, 관광산업 거점이 되겠다는 생각임.
- 두만강 개발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지린(吉林)성은 창춘(長春)과 지린(吉林), 투먼(圖們)을 연결하는 창-지-투 개방 선도구 건설에 주



- 력하고 있음. 창춘과 지린, 투먼 일대 3만㎡를 개발하고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를 개척,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의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동북지방의 물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임.
- 연변자치주는 옌지(延吉)-룽징(龍井)-투먼(圖們)을 통합하는 ‘옌룽투 일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3개 지역을 단일 도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지린성은 2007년 옌-룽-투 일체화 사업을 승인함. 최근에는 동북 3성을 단일 경제블록으로 묶는 ‘대동북’ 구상도 제기되고 있음.
 - 주장(珠江)삼각주, 창장(長江)삼각주처럼, 행정체계를 달리하는 3개 성이 단일 경제 협력체를 형성해 경쟁력을 확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얘기임. 과당 경쟁을 피하는 대신 지역 특성을 살린 성(省)별 특화산업을 발굴, 3개 성이 공동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음.
 - 지린대 정지국 교수는 “동북진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동북지역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 3개 성이 공동으로 지원한다거나 투자 적격성을 심의, 우선순위에 따라 교통망을 확보하는 등 협력과 조정을 통해 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동북 경제블록의 필요성을 강조함.

● 中 국무원 “동북진흥 박차 가해야”(10/28)

- 중국 국무원이 최근 동북진흥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 동북 노후공업기지 개조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인민일보가 27일 보도함. 신문은 국무원이 최근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가속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동북 공업기지가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 경제발전에도 많이 공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함.
- 이는 2003년 국무원이 처음으로 동북진흥에 관한 의견을 밝힌 데 이어 2번째 입장 표명으로, 동북진흥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국무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동북진흥의 핵심 사업인 라오닝경제벨트 구축 사업을 국가산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데 이어 8월에는 라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3성의 노후산업기지를 첨단산업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동북지방 등 노후산업기지 진흥에 관한 계획’을 승인함.
- 동북지역은 북한과 러시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다로 진출할 수 있어 동북이 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1990년대 중국 개혁개방의 초점이 광둥과 상하이 등 연해지역 개발에 맞춰지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음. 그러나 2003년 중앙 정부가 동북진흥책을 발표, 노후 공업기지 개조 의지를 밝히면서 전환점을 맞았음.
- 지난해 동북3성의 경제총액은 2조8천196억 위안으로, 2003년에 비



해 배로 늘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13.5%로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음. 특히 지난해 세계 금융 위기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큰 타격을 받았던 연해지역과 달리 외자 의존도가 낮았던 동북3성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日여3당 “외국인 참정권 임시국회 처리 곤란”(10/28)

- 일본의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 등 여 3당이 최근 국회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지난 26일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현지 언론이 28일 전함. 이는 여 3당 내에서도 참정권 부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 앞서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22일 “(참정권 부여 법안은) 가까운 장래의 과제로서, 법안 제출을 시야에 두고 있다”면서도 “정부측에서는 법안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임시국회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음. 다만, 여 3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참정권 부여 법안, 그리고 국회에서의 관료 답변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데는 의견을 모았음.
-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당 간사장은 지난 9월 “내년 1월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에서는 결론을 내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찬성파와 신중파가 각각 모임을 만들고 의견을 모으는 상황이어서 향후 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음. 또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은 지금까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권 내 조정도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 개최(10/27)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머레이 맥컬리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양국 장관은 특히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올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FTA 타결이 경제 통상 분야는 물론 교육, 문화,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유 장관은 또 오는 11월 오클랜드에서 개최되는 한·호주·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서밋(KANZ Broadband Summit)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 기업들이 뉴질랜드의 인터넷 광통신망 확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이어 유 장관은 한국 국민이 선호하는 이민과 관광, 유학 대상국인 뉴질랜드와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하는 한편 ‘워킹홀리데이 프로



그램'이 양국 청소년 교류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청함. 양국 장관은 아울러 유엔을 비롯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 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협력체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함.

● **李대통령 “北 의도, 아직 불투명”(10/26)**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아직 북한의 의도가 불투명하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지막날인 25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업무 오찬에 참석, 이같이 말함. EAS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로 이번에 4번째 정상회의를 가졌으며 이 대통령은 처음 참석함.
-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대화의 길을 계속 열어놓되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의 엄격한 이행 등 단합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진정한 대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포기의 결단을 내리고 조속히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는 북한이 최근 북핵 양자 및 다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밝히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북한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대두된 이후 국제사회의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전진과 후퇴, 지연을 반복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으며 더 이상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판단에 따라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과 경제원 등에 대해 일괄합의하는 방안”이라고 밝힘.
-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최근 빈발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연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재난관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 역내 기후변화 대응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함.
- EAS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장성명과 재난관리 성명, 날란다대학 재건에 대한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함. 날란다대학은 5세기경 세워진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인도는 지난 2007년 EAS 정상회의 때 날란다대학 재건 사업을 제안했었음. 이 대통령은 또 케빈 리더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G20 체제 강화, 기후변화 대처,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설명했으며 러드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양국 정상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함. 한편 한·중·일 통상장관들은 이날 후아회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이전에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산관학 연구를 출범시키기로 함.

● 하토야마 “亞정상 대부분 공동체 공감”(10/26)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다고 밝힘. NHK방송은 26일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과로 각국 정상들과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신이 제창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공감을 얻었다는 점을 꼽았다고 전함.
- 하토야마 총리는 “많은 정상들에게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설명했다”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관계 강화가 이 지역의 경제와 평화의 실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그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각국 정상들에게 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결과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함. 그는 또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협력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아시아 각국의 정상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이 그런 기회여서 아주 좋았다”고 밝힘.
- 하토야마 총리는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공동체의 전제로 ‘미일 동맹관계 강화를 통한 기축론’을 들고나와 관심을 끌었음. 그는 동아시아공동체에서 미국을 배제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에서 180도 선회해 “미국을 배제하지않겠다”고 말함.
- 한편 하토야마 총리는 25일 열린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구온난화대책 관련 자금으로 4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함. 인도네시아에 대한 차관 공여는 하토야마 총리가 개발도상국에 온난화 대책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이른바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적용한 첫 사례임.

● 한-불가리아 문화장관 회담(10/26)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방한 중인 베즈디 라쉬도프 불가리아 문화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피아 축제, 국립극장페스티벌 등 자국의 문화축제에 상대국을 서로 초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문화부가 밝힘.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문화부 장관실에서 열린 라쉬도프 장관과의 회담에서 그동안 양국간 문화교류가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이



처럼 합의함. 또 양국 장관은 내년 수교 20주년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2011년 이후 교류 프로그램을 협의하기 위해 올해안에 국장급 실무자회의도 열기로 함. 앞서 양국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 배석해 ‘2009-2012 문화교류 시행계획서’도 체결함.

● <中-대만 경제통합 가속화>(10/26)

-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중국과 대만은 연내에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관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해 이르면 내년 초에 이 협정을 공식 체결할 예정임. 이렇게 되면 중국의 풍부한 시장과 노동력 대만의 자본력, 기술 등이 일체화됨으로써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왕이(王毅)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임은 25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2009 양안(兩岸)관계 경제협력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중국은 대만과의 ECFA에 관한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서 “연말 이전에 양안 간 경제협력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함.
- 왕 주임은 이 협정이 양안 경제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양안이란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무역과 서비스 교역, 투자 및 경제협력 등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제도”라고 말함. 그는 “협정 체결은 양안 동포의 복지 증진과 상호간의 장점을 극대화해 상생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냄.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도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중국과 내년에 자유무역협정과 비슷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 협정은 내년 초에 중국 해협 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간의 제5차 양안(兩岸) 회담에서 체결돼 내년 5월께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마 총통 취임 후 지금까지 3번 열린 양안회담을 통해 양측은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신(通信)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대삼통(大三通)’ 시대를 열었고 지난 5월부터는 중국 기업의 대만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전면적인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은 대만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만해협 서안인 푸젠(福建)성을 대규모 경제특구로 개발키로 했으며 중국과 대만은 1949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내년부터 관광사무소를 상호 개설해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한 바 있음.

● 대만, 유엔 산하 국제검사협회(IAP) 가입(10/26)

- 대만이 유엔 산하 단체인 국제검사협회(IAP)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대만 법무부가 26일 밝힘. 법무부는 대만이 ‘차이니스 타이베이’(中華臺北) 호칭으로 중국도 회원국인 IAP에 가입됐다고 IAP가 통보해 왔다고 밝힘. 대만은 지난 수년 간 검사들이 개인 회원 자격



으로 IAP 회의와 활동들에 참여해 왔으나 이번에 중화민국 명칭을 포기하고 ‘중화타이베이검사협회’(Chinese Taipei Association of Prosecutors) 명칭으로 가입에 성공한 것임.

- ‘차이니즈 타이베이’ 호칭은 중국측 요청을 대만이 수용한 것이며, 이번 가입으로 대만은 국제 형사 사건들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편 IAP 회의들을 대만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 IAP는 유엔이 마약불법거래, 인신밀매, 자금세탁, 사기같은 국제 범죄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법 공조를 위해 1995년 설립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자문 기구이자 세계 유일의 검사 기구로 현재 130여국이 가입돼 있고 한국은 부회장국임. 대만 정부는 중국의 도움으로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만 외교부 허우 청산(侯淸山) 차장(차관)은 올 가을 ICAO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12월 이후 UNFCCC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